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4~2005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안보정세	3
2. 북한 핵문제	10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13
가. 한·미관계	13
나. 한·중관계	20
다. 한·일관계	24
라. 한·러관계	27
II. 북한정세	33
1. 대내정세	35
가. 정치동향	35
나. 경제동향	39
다. 사회동향	45
라. 군사동향	50
2. 주요 대외관계	55
가. 북·미관계	55
나. 북·중관계	60
다. 북·일관계	64
라. 북·러관계	67
마. 북·EU관계	70
3. 대남동향	75

Ⅲ. 남북한관계	81
1. 남북대화	83
가. 장관급회담	83
나. 남북장성급회담	85
다. 경제분야 회담	88
2. 남북교류협력	92
가. 경제분야	92
나. 사회분야	99
3. 인도주의 사안	103
가. 대북지원	103
나. 이산가족문제	108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112
라. 인권문제	118
 부록: 2004년 주요 사건일지	 123

I

동북아정세

1. 동북아안보정세

2004년에도 미국이 한·일과의 동맹관계 재조정·강화 그리고 북핵문제와 대만독립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동북아질서를 주도하였으나, 중·일·러 사이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경쟁도 심화되었다. 후진타오시대를 맞아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 등 공세적 한반도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역내에서 책임 강대국으로서 역할 강화를 모색하였다. 1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시도하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정치대국으로 도약하고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보통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카드로 활용하여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꾀하였다.

미국이 반테러전 수행에 세계안보전략의 중점을 둠으로써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의 두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중간에 건설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사이에 다소간의 이견이 노출되었지만 한·일이 병력을 파병하여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한·미·일간 안보협력관계도 강화되었다. 다만, 미국 내 신보수주의자들이 미·일동맹 강화와 중앙아시아지역 진출 그리고 중국 내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경제·군사적 압박수단과 북한체제 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지역 강대국인 중·일간의 상호 불신과 영향력 강화 경쟁도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장애가 되었다.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승계하여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진 후진타오의 영도 아래 8% 대의 고도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대만독립 저지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에 대해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부시 미국 행정부도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 수행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유도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대만 군사무기 판매, 홍콩 민주화 요구, 유럽연합(EU)에 대한 대중 무기금수조치 불해제 요구 그리고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체니 미국 부통령과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지도자들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졌고, 파월 국무장관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마이어스 합참의장과 파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비롯한 지역안보정세와 군축 및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우의 부총리와 탕자쉬엔 국무위원 그리고 파이빙귀 외교부 부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만의 독립을 저지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북핵 등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만해협의 현상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왔으며, 과거와 달리 미국 대선 과정에서 중국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도 미·중간에 잠재된 갈등요인들이 수면위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러관계 발전도 2004년 동북아 안보질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상대국 방문 그리고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부장의 중국방문 등 지도부 교환 방문 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졌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서부대개발 추진으로 중·러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바오 총리 방러 시(9.21~25) 러시아의 대중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에 에너지 확보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위한 중·러간 협력논의가 지속되었으며,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10.15)하였다. 푸틴 대통령 방중 시 중·러간 마지막 국경분쟁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헤이샤쯔섬 귀속문제를 타결지어 국경분쟁을 종식시켰으며, 대만문제와 체첸문제에 대한 상호 지원을 약속하였다. 중·러간 협력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안보기구 틀 속에서도 추진되었다. 상하이협력기구 대테러센터 설치에 합의(6.17)하였고, 지역안보와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중·러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부시 미국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띤 측면도 있었다. 중·러는 반테러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이 반테러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테러전 명분하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을 비판하였다.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대응 기동군화 정책과 미·일동맹의 지역안보유지 기능으로의 전환을 기회로 일본은 육상자위대 해외파병, 자위대 함정의 인도양과 중동지역 해역 진출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하고 있다.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전수방위’에서 다가

능·탄력방위로 전환하기로 하고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방위정책 근간으로 설정하는 ‘신방위계획대강’이 일본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통과(12.10)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사역할 강화기반이 마련되었다.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 움직임은 다분히 미국의 용인 이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아태지역의 전략 중심축으로 삼아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량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위협 의식을 느끼도록 하고 있으며, 중·일관계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중·일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해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조어도 영유권 분쟁이 재연되었다. 중국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해역을 침범하고 일본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일이 발생(11.10)한 것도 동중국해 해역에서 제해권 장악을 위한 중·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본 자위대 병력의 해외파병과 자위대 함정의 활동범위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지도자들 역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위협하게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기금(ODA) 제공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2004년에도 고이즈미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중·일관계 개선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2차에 걸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고, 중국은 중·일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신사참배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계속 참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일간에는 2001년 이래 최고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 그리고 조어도와 독도를 비롯하여 북방 4도 영유권을 둘러싼 지역국 간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역내국가간 정치적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전 세계차원에서는 세계화와 지역통합 추세가 진전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가 여전히 팽배해 있다.

대만문제도 북핵문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동북아 안보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월 20일 총통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법안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만 내에 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국은 국민투표 실시를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양안간 긴장이 초래되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지향해 온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의 '범록' 후보로 출마한 천수이볜이 우여곡절 끝에 재선된 후에도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대만독립 행보를 지속하자, 중국은 대만이 법적 독립을 선언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조기경보기 등 180억 달러 상당의 무기구매안을 입법원에 상정하였으며, 여우시쿤 대만 행정원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상하이를 공격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중국은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엔 제59차 총무위에 대만이 제기한 유엔 가입안 상정이 과거와 다름없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9.15)되었다. 12월 11일 개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추진해 온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2006년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신헌법 제정 가능성이 줄어들고 양안간 긴장국면이 다소 완화되었다.

동북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국가들의 다양한 논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한·중·일이 외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협력선언이 채택되었고, 아세안+3 정상회담(11.29)에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창설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동북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중·일간 경쟁국면이 전개되었는데, 중국이 아시아동화권 창설을 주장하고 중국-동남아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과정을 주도하였지만,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전되는 등 동북아 경제통합 과정은 일본이 선도해가는 국면이다.

2005년 동북아안보정세는 부시 집권2기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시행정부는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 틀을 이용한 대화해결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안보대화도 지속할 전망이다. 대만 내에서 독립 행보가 강화될 경우 예상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국과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이 이라크문제와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2005년에도 미·중간 안보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진용이 신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되어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를 견제하기 위한 중·러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동

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대만해협사태 개입 방향으로 재조정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와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연대망 구축 노력을 강화할 여지도 있다.

패전 60주년을 맞아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규정하였고, 유엔창설 60주년을 맞아 안보리개혁 논의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일간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어 회담에 진전이 있을 경우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의 발전 논의가 예상되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지역국들의 이견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될 것이다.

러시아가 조만간 극동지역 송유관 노선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중·일간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동해지역에서 중·일간 해저자원 탐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중, 일 3국의 에너지자원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협력 논의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에 진전이 예상되고 한·중 간에도 자유무역협정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분위기는 고조될 전망이다.

● 신상진 · 광운대 중국학과 부교수

2. 북한 핵문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4년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제2차 6자회담(2.25~28)에서 참가국들은 북핵폐기, 핵동결 대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 회담의 정례화 및 실무그룹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경우에만 핵폐기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 원칙에 의한 북한 핵능력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핵활동의 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핵활동의 동결과 관련해서 북한이 동결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동결상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동결은 핵폐기로 가는 잠정단계라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차 6자회담(6.23~26)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방안과 유사한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해서 제시했다. 미국은 핵활동의 동결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이 기간 중에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바로 핵폐기로 들어간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CVID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핵폐기 전에 보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제3차 회담에서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 차례 개최된 6자회담은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첫째, 공동발표문 초안도 만들지 못한 채 의장이 구두로 협의내용

을 요약해 발표했던 1차 회담 때와 달리, 제2차 회담에서는 의장성명이라는 다소 진전된 회담 마무리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6자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둘째, 제2차 회담에서부터 차기 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에 합의하기 시작한 것도 회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결실로 꼽을 수 있다. 셋째, 본회담을 준비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실무그룹이 3차 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가동을 했다.

한편 북한은 2003년 6월 6일자 외무성대변인 회견에서부터 핵 억지력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외무성대변인은 NPT 탈퇴를 이유로 들면서 “우리는 지금 핵 억제력을 갖추는 문제에서 미국과 기타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꼭 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첨단 군사장비의 한반도 배치를 근거로 핵 억지력을 유지함과 아울러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히고 있다.

2003년 봄에 개최된 3자회담 이후 지난 2년여의 협상기간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협상의 앞날도 불투명함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는 2005년에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선 이후 6개월 동안이 북핵문제의 해결 방향을 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이 북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다. 첫째, 2002년 이후 북한이 핵능

력을 계속 증강시켜왔고 핵 억지력의 보유를 공언하는 등 북핵문제가 안보적인 위기로 비화됨으로써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공화, 민주 양당이 북핵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법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선에 성공한 부시대통령이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하에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최종적으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능력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 만큼 미국 전체가 북한 핵문제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한다면 핵폐기의 실무적인 절차는 남아공의 사례를, 북·미관계의 개선을 포함한 다른 문제는 리비아의 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남아공이 3년 만에 핵폐기와 검증에 완료했듯이, 북한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폐기와 검증에 협력함으로써 검증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제재가 해제되고 불과 6개월 만에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던 리비아와 같이,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미관계도 급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는 가운데 한두 차례의 6자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경제제재 및 PSI 등을 통한 준군사적인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 전성훈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2003년과 마찬가지로 2004년 한·미관계의 핵심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발전문제였다. 2002년 10월 이후 다시 붙어진 북핵문제는 동 문제를 평화변영정책 추진의 해결과제로 보는 한국과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미국 간의 공동 해결책을 강구하는 문제가 중요하였고, 한·미 안보동맹관계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파병,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재배치, 미래한·미동맹구상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금년 들어 베이징에서 두 차례(2차: 2.25~28, 3차: 6.23~26) 열렸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형성된 이래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6자회담 대표회담 등을 통하여 정책 조율을 해왔다. 2004년에도 양국 간의 이러한 정책 협의가 이어졌다.

6자회담과 관련,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3자 정책협의회(워싱턴, 1.21~22; 서울, 2.23; 샌프란시스코, 4.7~8; 워싱턴, 6.13~14)를 갖고 북핵문제의 주요사안을 협의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월 초 서울을 방문, 반기문 외교장관과 면담(2.2) 등 정책협의를 하였다. 동 협의에서 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라크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2.13)된 후, 한국 정부는 3,600

명 규모의 ‘평화재건사단’인 자이툰(올리브)부대를 창설(2.23)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이라크에 파병을 완료하였다. 한·미 4차 고위협의회의(2+2회의)가 한국의 반기문 외교, 조영길 국방 장관과 미국의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2.17)되었다. 양국은 한·미동맹, 이라크파병, 북핵문제와 2차 6자회담, 한·미 미래동맹 문제 등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전반의 협력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장관은 3월 초 워싱턴을 방문하여 조지 부시 대통령을 면담(3.2)하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의 외무장관회담(3.4)을 비롯하여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이라크파병, 북핵문제 등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7.9)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 면담을 비롯 한국의 고위외교안보정책담당자들과 접촉하고 이라크파병,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 발전 의사를 담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례 한·미고위정책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6자회담 개최를 통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관계 발전 방향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8.30)을 하였다. 파월 국무장관은 서울을 방문(10.25~26)하여 한국 정부와 북핵문제 등 양국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한·미간 정책협의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11.20)을 갖고,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동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사활적 이슈’(vital issue)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정책협의를 북핵문제 이외에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전략물자 반출문제에 관해서도 이루어졌다. 미국은 자국 안보와 WMD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북한 등 문제국가에 미국산 제품·기술이 일정부분 이상 포함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내법인 수출관리규정(EAR)을 운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미 중 미 상무부 당국과 바세나르협약(Vassenaar Agreement)에 따른 전략물자와 EAR 관련 수출통제 품목의 개성공단 반출문제에 관한 협의(9.1)를 하였다. 미국 측은 원칙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지·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북한문제와 관련,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미 상원(9.28)과 하원(7.21, 10.4)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10.18)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에 대해 동 법안의 ‘신중처리’를 요청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27명이 서명한 서한이 주한미대사관에 전달(9.2)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프랑스, 독일 등과는 달리 동 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막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지원함으로써, 동 문제는 IAEA 의장 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문제와 관련해서도 2004년 한 해 동안 양국간에 다양한 정책협약이 진행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를 시작하였다. 2004년도에는 도합 7차례의 회의(제6차: 1.15~16, 제7차: 2.13~14, 제8차: 5.6~7, 제9차: 6.7~8, 제10차: 7.22~23, 제11차: 8.19~20, 제12차: 9.21~22)를 가졌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루어진 FOTA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용산 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력증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조영길 한국 국방부 장관과 린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제3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가 중 싱가포르에서 장관회담을 개최(6.4)하여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강화 노력,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 안보현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미국을 방문, 10월 21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력 증강, 주한 미군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보강 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가졌다. 워싱턴에서 개최(10.22)된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FOTA 결과를 확인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지속,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 전환 및 재조정의 이행을 통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래 안보현안을 논의할 새 협의체로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SPI는 FOTA를 계승하면서도 향후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를 설정하는 논의 채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재설정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한국의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 이전협정)’과 그 이행합의서가 서명(10.26)되었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이라크 지원부대를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한국 측에 통보하였다. 한국은 제11차 FOTA회의(8.19~20)에서 이라크지원을 위한 미2여단 전투단의 차출에 동의하는 한편, 감축대상 전력규모와 시기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공식·비공식협의를 거쳐 제12차 FOTA 회의(9.21~22)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이라크 차출 병력을 포함한 12,500명을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0.6). 동 발표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2006년까지 3년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이 포함되었다.

11월 초 워싱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NSC 고위 인사 간의 정책협의(11.9~10)도 있었다. 래리 월커슨 국무장관 비서실장과 파이젠 바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보좌관 등이 한국을 방문(11.14~17), 한국 정부 관계자와 여야의원들을 면담하고, 북핵문제 등 한·미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미동맹관계와 관련,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따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고위급협상이 두 차례 개최(워싱턴, 11.1~2; 서울, 12.8~9)되었다. 한·미 양국은 협정의 유효기간, 분담금 총액,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긴밀한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다.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접근에 있어 다소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공동 방미단을 구성하고 워싱턴을 방문(11.16~21)하여 미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요 정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의원외교를 전개하였다. 이어 여야 공동의 국회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12.3~9)하여 미 행정부와 의회의 고위인사들과 접촉하고 주요 정책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한·미관계의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한·미간의 정책협약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에서의 이상설(異常說)이 끊이지 않았다. 한·미관계 이상설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9.3)에서 영국, 일본 등 이라크전쟁 동맹국들을 예로 들면서 3,600명의 병력을 파견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증폭되었으나, 추후에 미국은 단순한 누라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일본을 ‘핵심 동맹’(key ally)으로, 한국을 ‘귀중한 민주 동맹’(valued democratic ally)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도의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문제와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기간의 연장문제이다.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의 재확인에 따라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해결 모색을 강화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일본과 함께 북핵문제 3자 정책협의회와 함께 각급 수준의 정책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 6자회담 재개 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 타협이 이루어져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관

제도 이상설을 잠재우고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북한이 ‘핵 공갈’ 카드를 활용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조치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문제는 파병과정에서 파병반대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긴밀한 유지를 위해 미국의 파병기간 연장 요청에 응하여 2004년 11월 독자적으로 파병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한국군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 철수 요구 여론이 증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의 효과에 따라 한·미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용산 기지 이전협정이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04년도에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한 사항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 국력신장에 따른 균형적인 한·미관계로의 조정을 바라며,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맹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004년에 합의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 연합 군사능력의 발전과 대북 억지력 향상 추진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의 공동 인식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한국 방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동맹의 역할과 협력 방식 등을 제도화하고, 안보 상황

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협조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다.

● 박영호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한·중관계

2004년의 한·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한 한 해였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루어진 한·중 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004년에도 지속된 가운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경제협력은 한층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는 기존의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발전 추세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중수교 12년을 맞이한 2004년은 한·중관계가 협력의 틀 속에서 갈등을 보인 첫 해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협력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차 6자회담(2.25~28)이 끝난 직후, 양국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방중(3.17~18)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중(3.28~29)을 통해 외교적 협력을 모색했다. 특히,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반기문 장관과의 회담 시 한·중 동반자관계를 계속해 나가는데 필요한 4대 원칙으로, 정치적 상호신뢰 심화와 이를 위한 고위층 방문의 확대, 경제무역관계의 강화를 통한 전면적 협력관계의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국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조남기 전 전국정협 부주석이 우호협력 차원에서 방한(6.1)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방중(6.30)하여 장쩌민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3차 6자회담(6.23~26)에서의 협력을 위해 추이텐카이 외교부 아주국장이 방한(6.9)하여 의제 및 일정 등을 조율하였다. 3차 6자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위해 닝푸쿠이 북핵 대사가 방한(8.2)하여 3차 북핵 실무그룹회의의 개최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등, 양국의 외교적 노력은 4차 6자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된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표명한 가운데,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중(12.21)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협력기조 속에서, 2002년 2월 공식 출범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고구려 역사왜곡은 양국관계에 심각한 마찰을 초래했다. 중국은 고구려를 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자국사에 편입시켰고, 이를 외교부 홈페이지에 반영(4.22)하였으며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에도 보도(7.2)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김하중 주중대사를 통해 중국정부에 공식 항의(7.13)하는 한편 리빈 주한 중국대사에도 강력하게 항의(7.14)하였다. 국내에 반중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고구려사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7.19)하고, 아·태국장을 중국에 파견(8.5~6)하여 중국공산당과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였다. 한국 측의 예상외의 반발에 놀란 중국은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급파하여 최영진 차관과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협의한 후 ‘5개항의 구두양해’에 합의(8.24)하였다. 중

국의 역사교과서에 고구려사 왜곡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왜곡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두양해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한·중간의 갈등은 진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구려 역사 왜곡으로 불거진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은 남북관계의 경색, 6자회담 조기 개최의 불확실성, 북·중관계의 우호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 하에 상호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권력 서열 4위인 자칭린 전국정협 주석이 우호 방문(8.26~29)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간의 공동 관심사에 폭넓은 협력을 다짐했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국제무대에서 정상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 회동(10.7)하여 고구려사와 북핵문제를 포함해 제반 분야에서 한·중간의 협력강화를 논의하였다. 또한 칠레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11.20)을 갖고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어서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11.29)을 갖고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환율문제 등 아시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중간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04년 1~9

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362억8,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4%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08억1,200만 달러로 33.8% 증가하였다. 전체 무역 수지 222억 달러 중 70%에 해당하는 154억 달러의 흑자를 대중교역에서만 기록했다. 총 교역액도 이미 2003년 전체 교역액인 57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8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국의 해외투자도 중국에 집중되어 22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가 밀접해 짐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도 증가했다. 한·중·일 재계가 FTA와 에너지 협력을 논의(11.4)하였고, 한·중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11.25)도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 양국간의 증대된 교류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11.25)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양측 어선규모에 합의하고 불법 조업 어선의 단속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8차례에 걸쳐 쌀 수입문제에 관한 협상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통과(7.21)된 북한인권법의 영향으로 탈북자들이 한국국제학교(10.22)와 총영사관(10.25)에 진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 지원 배후조직에 대한 색출작업을 강화하였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던 한국인 김홍균과 이수철을 연행하였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문제와 탈북자 지원 한국인의 석방문제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와 농산물 수입문제 등은 2005년도에도 한·

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5년도에도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역사왜곡문제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잠재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한·중관계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정치외교적 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특히 경제교류와 협력의 추세를 감안하면 한·중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의 기초를 유지할 전망이다.

● 전병곤 ·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다. 한·일관계

2004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안보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 일본총리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7.21)에서 북핵문제, 북·일수교, 한·일 과거사정리, 비자면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은 구체적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고 일본도 2002년 평양선언에 입각해서 북·일수교와 대북경협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대통령은 “내 임기 중 공식의제로 과거사문제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일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날 내년 4~9월 일본 아이치현(愛知)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기간 중 한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입국사증)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구적 면제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노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11.29)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3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결의 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치무라(町村)일본신임외상과 전화통화(9.30)를 갖고 양국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 일본의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난징(南京)학살, 조선인 및 중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사실을 삭제한 개정판 교과서 검정을 일본정부에 신청(8.12)하였다. 또한 “독도는 일본영토”란 주장을 교과서에 담았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나카야마(中山)문부과학상은 오이타(大分)현 벳푸(別府)

사에서 열린 한 모임(11.29)에서 “최근 역사교과서에서 중군위안부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며 “과거의 교과서는 매우 자학적이었으며 일본은 나쁜 일만 했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주요 언론 및 방송은 아직도 일본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망언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극우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土道會) 회원 4명이 소형선박을 이용, 독도상륙을 5월 15일 시도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들은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해서 우리의 국제법적 권리를 흔들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이날 “일본정부에 이들의 출항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뜻”을 전했으며 “이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할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기상악화와 일본정부의 만류로 출항하지 못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유엔총회(9.22)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 온 일본의 역할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관계자는 모두 이제 공론화 단계인데 공식적으로는 “입장 표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개편 논의에서 “지금은 상임이사국 증설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가장 큰 현안은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다. 올해 1~8월 대일무역적자는 15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같

은 기간보다 32.1% 늘어났다. 올 대일 무역적자는 사상최고치인 2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대일수출도 지난 2000년 20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대일의존적 산업구조, 일본의 기술보호주의 및 일본시장의 폐쇄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향후 전망을 한다면, 노 대통령이 과거사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 우익인사들의 망언이 계속 터질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상존한다.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 일본 우익인사들의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양국간의 긴장관계를 촉발시킬 소지가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6자회담 공조문제, 양국무역불균형 문제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 김영춘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관계

한·러 양국은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및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외무장관의 상호방문 및 모스크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고, 양국은 경협증진을 위한 접촉을 활발히 하였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대선(3.14)에서 재선된 푸틴 대통령 앞으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축전을 발송하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내의 대통령 탄핵정국이 해소됨에 따라서 대러 외교 강화를 위해 모스크바(5.23~25)와 블라디보스톡(26~27)을 방문하였다. 라브로프 러시아 신임 외무장관과의 회담(5.25)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주요 실질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 양국관계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다킨 연해주 지사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양국간 에너지, 수산분야 등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직후 남북한 동시 방문을 위해 방한(7.3~4)하였다. 그는 반기문 장관 등과의 회담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양국은 한국의 평화변영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정책이 갖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북핵문제, TKR-TSR 연결사업,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등 한·러간 실질 협력사업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였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 결과,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9.21)되었다. 양국 정상은 한·러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에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는 10개 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원칙 재확인 및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강화, WMD 비확산, 정상간 회동 정례화, 경험 확대, 상호주의 차원의 총영사관 신설 추진, 테러리즘 공동대처, 세계평화와 안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유엔의 역할 지지, 푸틴 대통령 방한 초청 등이다.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루슈코프 모스크바 시장이 러시아가 주관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에서 개최되는 ‘모스크바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4.22~25)하였다. 재러 고려인협회는 6~10월 모스크바를 비롯한 고려인 밀집거주 10여개 도시에서 학술제, 영화제, 전시회,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고려인 이주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고, 러시아 정부도 야코블레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번 행사를 지원하였다. 남북한 정부도 기념행사에 문화공연단 등을 파견하였다. 민관합동 협의체로 1999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가 공동주관으로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제6차 한·러 포럼이 강원도 평창에서 양국 각계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10.25~26)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성과를 제고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모멘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안보·군사 면에서, 러시아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관련 2차(2.25~28)와 3차(6.23~26)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일괄타결 및 ‘동결 대 보상’ 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미사일 순양함 1척과 대잠 초계함 2척으로 구성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인천항을 공식 방문(2.10~15)하여 한국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해군장병들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에서 일본 함정과 전투를 벌이다 자폭한 러시아 해군병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우리 정부는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내

WMD 확산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범세계적 협력프로그램인 ‘대량과 괴무기 및 물질의 확산대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결정(6.9)하였다.

경제면에서, 양국 경제부총리급 협의채널인 한·러 경제공동위 산하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2.19~20)되어 한국측 50여 명, 러시아측 30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양측간 통상과 투자 확대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국내 도입경로가 북한 통과 노선 보다는 서해노선(이르쿠츠크-창춘-선양-다롄-평택)으로 사실상 확정돼 2008년부터 가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가스 프롬측은 가스를 서유럽에 우선 수출하고 한국을 포함한 중국라인 공급을 2012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25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TKR-TSR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한·러시아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회합(4.28~30)을 가졌다. 3국은 그동안 쌍무회담을 통해 철도연계 방안을 협의해 왔다. 3국 대표자들은 철도연계를 위한 자원 마련, 한반도내 연결 노선, 철도기관 간 공동연구 등 철도연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한국의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관·학계 인사들은 푸틴 대통령의 think-tank인 러시아 전략문제연구소와 모스크바에서 제2차 한·러 경제세미나를 개최(7.7)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동북아 에너지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황 본부장은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과 한·러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5년에 한·러 양국은 2004년의 정상회담 결과를 기초로 동반

자관계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국제문제, 특히 북핵문제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국제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러시아내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대형사업 및 합작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극동지역에서 경험 활성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이해일치로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은 확대될 것이나, 한국경제의 침체로 대러 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인곤 · 국제관계연구실 실장

I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2004년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체제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가 김정일 정권의 교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이 CVID가 북핵해결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정권의 교체가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을 고립·압살시키려는 미국의 구체적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PSI 출범 직후부터 PSI는 명백히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불법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이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북한은 베트남을 통해 468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7.27~28)한 것에 대하여도, 미국의 적대정책의 산물이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와 내부의 동요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외신에서 권력이상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확대시켰다. 열차사고, 휴대폰 서비스 중단, 반정부 폐라살포설 등이 북한내부 동요의 징표로서 언급되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김정일의 측근이 많이 사망하거나 신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김

정일의 처 고영희의 사망 이외에도 장성택 실각설,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의 자동차 사고 부상설 등이 이어졌다. 북한의 대남 및 대외통의 변화도 있었다. 리광근 무역상과 김용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경질되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명철 체육지도위원장 겸 올림픽위원장이 사망하였고, 남북 장관급 회담의 새 단장으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 등장하였다. 대남 및 대외라인의 변동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개방에 따른 후유증의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하였다. 우선 북한은 대외적으로 강경한 레토릭을 구사하며 반발하였다. 금년 들어 북한은 PSI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 대미 경고를 거듭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사일 개발과 핵억제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북한인권 법안 및 대량탈북에 대응하여, 한국의 납치극이라고 비난하며, 유엔 고등판무관에게 남한과 미국이 북한주민을 납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해달라고 진정하고, 국제적십자에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탈북자의 대거 입북을 구실로, 6자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의 보이코트를 경고하였다.

둘째, 선군사상을 통해 김정일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고 담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계속 추구하였다.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 규정하고, 신년공동 사설에서도 2004년의 핵심 과업으로 3대전선(政治思想, 反帝軍事, 經濟科學) 강화를 제시하면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해로 설정하였다.

셋째, 북핵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전술로 민족공조를 내세웠다. ‘민족공조에서 기본은 책임있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이며, 당국 공조

를 높은 단계로 이끄므로써 민간급 공조를 추동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조의 주요 과제로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측 입장 지지와 남북경 제협력을 남북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2005년에는 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강경 구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선군정치발표 10돌,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해방 60돌, 당 창건 60돌과 같은 이벤트의 중요성을 활용하고자 하겠으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3.25), 정권창건 기념일(9.9), 당 창건 기념일(6.18) 등 각종 정치행사를 의례적이고 간소하게 치루었다.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주석단을 발표하지 않는 등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에 대한 승인도 없었다. 정권창건 56돌을 기념하여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나, ‘평주년’으로 지난해 정권창건 55돌과 같은 열병식, 군중시위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7돌(10.8)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중앙보고대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경제 침체와 안보위기 등 내우외환 속에서 후계자를 지명할 경우 김정일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권력기반이 실제로 흔들릴 수 있는 바, 김정일이 조만간 후계자를 지명할 가능성은 없다. 만일 김정일이 후계자를 지명한다면 실제로 김정일의 2선 후퇴를 의미하게 된다.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 북한의 대내정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와 밀접히 연관을 맺고 움직일 것이다.

첫째,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북·미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자신의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이라는 군사적 억제력을 과시하고, 대러, 대중 관계와 ‘민족 공조’의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대내적으로 선군 정치의 기치가 강화되고, 김정일 중심의 일치단결이 강조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과의 타협을 통한 체제보존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 핵포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추구하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에 우회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김정일이 전면에서 비켜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타겟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기만전술이 될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각종 구호가 약화되고 김정일의 대내외 활동을 축소시킬 것이다. 김정일 생일, 최고사령관 취임 및 당 총비서 기념행사 등이 간소화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은 핵 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임을 강조하며, 핵 포기를 조건으로 중국의 체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중국의 ‘화평 굴기’, ‘동북 공정’과 맞아 떨어져,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을 담보로 북한이 중국에 급격히 기울어질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북한이 강조하여 왔던 ‘주체의 강국’ 신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 사상학습을 필요로 한다.

● 최진욱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동향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 회의(3.25),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7.17) 등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2004년도 경제정책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 보장’과 ‘인민생활 보장’의 양대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예전과 다름없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 경제선행부문의 발전과 경공업·농업 생산에 주력했다. 금년도 경제정책 추진의 중점은 전력과 철강재 생산 증대, 정보기술·나노·생물공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교류사업의 강화와 투자 확대, 대외무역의 다각적인 발전 등이었다. 북한은 또한 도, 시, 군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경제관리에 관해서는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라는 원칙을 반복한 이외에, 2004년에는 ‘내각의 권위를 높일 것’, 모든 단위에서 ‘당, 행정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또한 ‘예비와 가능성의 동원을 통한 생산의 정상화’, ‘있는 생산토대의 효과적 이용’을 강조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을 결산하고, 2004년도 국가예산을 승인한 최고인민회의 11기 2차 회의는 2003년도에 연이어 재정규모를 밝히지 않고 일부비목 구성비만 공개했다. 2003년도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0~2001년간 전체 예산의 38% 수준에 머물던 인민적시책비의 비중이 2003년에는 40.5%로 증가했다. 군사비 비중은 예년의 14% 수준에서 2003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했다. 2000~2001년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점유하던 인민경제비의 비중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일부인 인민경제사업비가 2002년 22.7%에서

2003년에는 23.3%로 증가했다. 2004년도의 예산은 구체적 예산규모, 항목별 구성비는 발표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4년 북한의 예산구조는 2003년도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004년 예산규모는 2003년에 비해 수입 면에서는 5.7%, 지출 면에서는 8.6%가 각각 늘어났다. 국방비는 15.5%로 2003년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인민적시책비의 주요 구성 부분인 추가적시책비(8.1%), 교육비(9.5%), 보건비(5.9%)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이었다.

북한은 2004년도에도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체계를 유지했지만, 7월 조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문제, 대외 개방의 부작용 등으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함경도 등 일부지역에서 2003년 가을과 2004년 봄에 북한 정부는 집단농장의 농지 일부를 개인들에게 배분해 주었다. 가정주부를 제외하고 꾸준히 출근하는 직장 근로자에게 1인당 300평씩 분배했다. 토지는 상·중·하로 나누어 차등 세금을 거두었는데, 가장 좋은 토지는 평당 12원이었다. 북한은 2004년에 평양에 40여개, 시·군별로 1~2개씩 개설해 북한 전역에 약 300여개의 종합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종합시장에서는 사실상 판매물품에도 거의 제한이 없으며, 장세도 자리에 따라 차등화 되었다.

2004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2003년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에서 쌀값 190원, 달러 1000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4년도 3~4월 이후 쌀값이 급등하기 시작, 3~4월 350원, 6월 500원, 8, 9월 800원, 10월 1,000원대로 올랐다. 추수가 끝난 후, 쌀값은 해주에서 400원으로 하락했으나, 12월 회령과 청진

에서 700~780원선을 유지하는 등 지역격차가 심각했다. 달러는 9월경 2,000원대에 도달했다가 10~12월경 1800~1990원대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의 원인은 화폐개혁설에 따라 북한화폐처분 시도가 증가한 점, 인민폐의 가치절상(2000~2001년 경 1원당 북한 돈 22원, 2004년 10월경 함경북도에서 215~240원선)으로 대부분이 중국수입품인 공산품 소비재 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내부의 쌀값이 50% 폭등한데다(1Kg당 2위엔에서 3위엔),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감소(1~9월 전년동기 65% 감소)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3월 최고인민회의와 7월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외 무역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모든 경제 단위들에서 자체 수출기지를 조성하고, 합영·합작 기업을 확대하며, 국제기구들과 경제개발 협조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는 북·중간 무역이 급증하고, 특히 북한이 중국 민간 자본의 대북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2003년도 북·중 무역이 전년대비 38.6% 증가한데 이어, 2004년 1~9월은 전년대비 40.5%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수산물, 철강, 광물성연료, 광석, 의류, 아연, 목재 등 원자재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육류·철강·전기기기·기계류 등 5개 품목이었다.

다만 같은 기간 남북교역 및 일본과의 무역은 내수부진 및 남북자문제 때문에 소폭 감소했다. 과거 북·중 경제관계는 주로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했으나, 김정일의 중국 방문(4.19~21) 이후, 북한의 대중국 투자 유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몇 차례의 투자 유치 상담 및 상품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조선족 중심의 투

자였는데, 한쪽 자본이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국제구호기구 간의 협력은 계속되었지만, 북한은 9월 15일 2005년도 유엔기구의 합동호소과정(Consolidated Appeals Process)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북한과 관련한 합동호소의 장기화, 북한의 안보문제, 분배현장검증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북한정부와 개별 단체간의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기존의 농업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콩농사, 과수업, 축산 기지와 닭 공장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계식량기구는 국가배급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1,600만 명(전체주민의 70%)의 북한 주민은 2004년도 하루 최소 칼로리 필요량의 50%에 해당하는 300그램의 곡물을 배급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기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4/5 곡물연도에 대한 북한의 식량 생산은 42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했다. 세계식량기구는 내년도 북한 곡물 필요량을 90만 톤으로 산정하고, 그 중 50만 톤이 미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2004년도 김정일의 현지도 중 경제분야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고, 대부분 군부대에 치중했다(12월 24일까지 공개활동 90회중 군분야 62회로 69%). 현지도의 주요 내용은 ‘먹는 문제’ 해결과 산업현대화의 핵심 분야인 ‘기계공업’이었다. 주요 현지도에는 식료가공공장(1.11), 평남도 토지정리사업장(3.17), 낙원기계연합기업소(5.18), 구성공작기계공장(6.2), 청천강기계공장(6.3), 도자기공장(11.30) 등이 있었다. 김정일은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10월 14일 현재 7회의 현지도를 행했는데, 그 중 군대와 관련된 것이 5회였다. 이를 보면, 김정일이 ‘먹는 문제’와 관련 군 부식 조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북한의 공업 생산은 2003년도에 비해 호조를 보였다. 상반기 계획 완수 동향을 볼 때, 계획을 완수한 공장·기업소 수가 2003년도 총 53개에서 올해 총 67개로 26.4% 증가했다. 부문별로 금속·기계·화학 등 전통적인 중공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경공업·광업·전자공업 등 수출 및 설비현대화 관련 부문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고, 석탄 및 수력발전 등 에너지부문의 생산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북한은 특히 에너지·원자재 확보 및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주요 광업 생산에 주력하여 철강, 아연, 무연탄 생산이 크게 늘어났고, 또한 산업현대화의 핵심부문인 기계공업의 정상화, 그리고 도시정비 및 대규모 토목공사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 등에 주력했다.

북한은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진흥과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2004년도 예산에서 과학기술부문 지출이 전년 대비 60% 증액되었고, 대외 교류·협력활동도 21개국, 41건이 추진됐다. 북한은 해외연수 및 시찰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대상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중국 이외에도 독일·스위스 등 서방국가, UNDP·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확대했다. 북한은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해외 기술협력에 관심을 기울여, 총 44건의 기술협력 사업 중 16건(36%)이 이 분야에서 체결되었다. 북한은 이밖에도 합영·합작을 강화하여 총 17건을 성사시켰다.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에서 한국과 중국을 주요 대외경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활발히 진행했다.

제7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최(5.17), 전국수출상품전시회 개최(5.18), 북·중 상품판매센터 개설(5.28) 국제전시회, 상품판매센터 개설 등을 통해 무역 확대를 도모했으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했다. 러시아와는 철도, 건설, 농업 임업분야에서의 협력 유지와 강화, EU와의 경제협력협의 및 유럽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이 있었다.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추진되어, 경제시찰단, 무역대표단 등이 파견되었다. 북한은 또한 김정일 방중 이후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핵문제 해결에서 가시적 진전이 없는 한, 2005년도 북한의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은 최근 몇 년도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서방국가와의 급격한 경제협력 증대가 난망한 가운데, 자급형 경제순환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경공업, 농업 개선을 통해 인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원자재 및 임가공 중심의 수출산업 진흥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여전히 북한 정부가 당면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국가 수입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내부 생산과 수입 증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한편, 조세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가수입을 늘리는데 정책을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문제가 현저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경제 분권화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북한 정부는 경제관리 측면에서, 2002년 7월 체계를 지속하는 한편, 보다 광범하게 소경영체를 공식화

하는 대신, 그로부터 세금을 수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농업부문에서 소토지 분배를 확대하는 대신 토지세 징수를 강화하며, 서비스 및 유통 부문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준사영 국가 소기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조세징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비재부문에서 시장관계가 더욱 강력해지며, 이것이 계획통제하의 국영기간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 힘입어, 식량, 전력 등 핵심 부문의 생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원자재와 임가공품의 수출도 늘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에 획기적 개선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변화 과정에서, 식량과 생필품, 서비스의 전체 공급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점차로 심각해질 것이다.

● 박형중 · 평화안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04년 북한사회는 경제난 이후의 암시장의 활성화와 7·1조치 이후 도입된 시장요소들이 정착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시장사회적 요소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암시장이 합법화되어 종합시장이 설치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상행위가 부업 수준을 넘어 전업 상인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합시장이 설치됨에 따라 상품들의 판로가 보장되어 개인 및 기업차원에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상공생산제의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상인화(merchantization)되고, 생산물은 상품화(commercialization) 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제도면에서는 시장화(marketization)의 요소들이 확대되고 있다.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하고 물질 우선의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고위급에서부터 말단 주민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북한에서 암시장에서의 장사를 주도하였던 사람들은 복잡계층의 사람들로서, ‘장사를 해서 돈이나 벌자’라는 생각으로 암시장에 제일 먼저 나선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실리사회주의를 강조함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들에게도 실리 즉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의 가치관과 행위양식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7·1조치 이후 변화된 경제관리체제를 북한은 실리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리의 실제 의미는 ‘이윤 극대화’이다. 기업의 일군들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은 “실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충성이라는 것 하나로 자리를 지켰으나 이제는 충성도 해야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강조되면서 실리가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는 추세이다. 최근 방영된 TV 드라마 『비켜라』는 능력이 없는 간부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주제이다. 이러한 추세는 각 개인과 기관 및 기업소에서 공짜가 없는 이익추구의 방식으로 행위 양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도입되어 실리를 강조한 이래 기관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도 보수가 없이 무보수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은 없어지는 추세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모두 돈벌이

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일 해주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개혁·개방하여 잘 살게 된 것을 알고, 중국이 북한정책의 준거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거의 전부가 중국 상품임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동경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간부급 계층에서 남한 방송을 청취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공산품 매매를 허용하는 종합시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매매의 품목과 양이 확대되었고, 특히 공산품의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TV, 녹음기 등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고 외부의 영화와 비디오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간부들이 종합시장에서 신형 외제 TV를 구매함으로써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 수신되는 남한의 TV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배급제가 유상 배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의 배급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주민들의 생필품이 자신의 노동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당조직과 지도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대계층의 사람들만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그것이 이제 간부층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일부 공공건물에서 김정일의 사진이 제거된 것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북한에서 사회질서와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두 가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적 생활양식이 대체하면서 나타나

는 무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난이 가져온 사회적 일탈행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북한이 취한 조치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법의 개정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5년만에 형법을 개정(4.29)하였다. 개정된 형법에서는 경제 및 사회 범죄와 관련된 조항 대부분을 수정하는 등 종래 8장 161조였던 형법(1999년 개정)을 총 9장 303조로 대폭 개편하였다. 북한은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제도화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사상의 유입을 통제하는 조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용천역 열차폭발 사고(4.22) 이후 흥흥한 민심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핸드폰 사용을 통제하고, 탈북자들의 월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4년 북한의 사회통합 정책의 특징은 사상교양은 지속하되, 물리적 통제는 완화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엄하게 다스리지만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통제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다. 강압적인 통제가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방방법이 없어졌으며, 남한 방송을 듣는 경우 말을 옮기거나 행동으로 하지 않는 한은 비판서로 끝난다. 또한 가족연좌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본인 위주로 처벌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범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말 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행하고 있으며, 정치범의 경우에도 주모자와 피주모자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TV 시청, 가전제품의 유통 등에 대하여 미국의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북한

은 최근 미국이 북한 내부에 ‘부르주아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인민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흐리게 하기 위한 심리모략전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민들은 그 어떤 역경에서도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우리에게 굳게 뭉쳐 미제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셔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민주조선』, 10.20).

북한은 사회통합의 한 수단으로 반미주의 고취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 “이 법안은 사회주의 제도의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진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놓은 또 하나의 대조선 적대선언”이라고 비난하였고(『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10.5), 『조선중앙방송』 논평(10.7)에서는 동 법안 통과를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선언으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언급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북한 체체전복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04년 한 해 동안 미국과의 핵문제 대결을 선군정치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현재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고, 핵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선군정치를 구현해나가는 김정일의 정치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영도의 현명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로동신문』, 9.19).

2005년에도 시장사회의 발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당국은 시장화를 통제하기 보다는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도매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시장요소가 확대되는 한 계획부문은 시장요소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이나 정치의식에서 시장사회적 요소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며, 배급제 폐지, 7·1조치의 미흡한 경제적 성과 등으로 인하여 김정일의 경제부문에서의 능력에 회의를 가지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2005년에도 변화하고 있는 사회정세에 상응하여 북한 당국의 사회통합 강화 노력도 확대될 것이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 「북한인권법」의 통과 등으로 인한 체제불안정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주민들과 군인들을 상대로 일심단결을 주제로 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재진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2004년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 군사력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에 주력하였다. 먼저 북한 당국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반제군사전선’을 제시하고 이를 다지기 위한 군사력 강화 궤기대회 모임(1.3)을 가졌다. 여기에서 총참모장 김영춘은 “우리당이 반제군사전선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해 군력강화를 최우선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1주년(4.9)에서 “나라의 국방력을 다지며, 전당, 전국, 전민이 국방공업을 강력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기만적인 대화 타령으로 시간을 끌면서 군사적

으로 위협하면 할수록 그에 대응한 핵 억제력도 질량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함으로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핵무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국방공업 발전 우선적 추진”(『로동신문』, 6.9), “국방력 철벽으로 다져야”(『로동신문』, 7.27) “강력한 군사력만이 전쟁억제”(『로동신문』, 8.21), “국방력 더욱 강화할 것”(『로동신문』, 8.31), “총대는 국력의 기초이자 핵심”(『로동신문』, 9.9) “어떤 대가 치러도 군사력 강화”(『로동신문』, 9. 26), “군사적 억제력 강화”(『조선중앙방송』, 10.14) 등과 같은 제하의 논설 및 논평을 통해서 군사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이미 지난해(2003) 연말 국방비 증액을 단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내각의 로두철 부총리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회견(2003.12.24)에서 “공화국 정부는 혁명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직은 부족하고 어렵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방비를 0.5% 늘려 국방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데서 북한은 2002년, 2003년 연이어 국방비를 증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이 같은 공식적인 국방비 발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미국의 핵위협과 압박’에 군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 노력을 의미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치로 군사를 우선하는 전방위적인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오늘날의 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고 선군의 기치아래 ‘청년중시사상’을 강조함

으로써 청년군인들의 역할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청년들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혁명의 전위부대로”로 만들어서 이들을 “선군정치 실현을 위한 예비역량”화 함으로써 북한 청년들의 군사자원화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몸소 실천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2004년 11월 말 현재 김위원장의 총 공개활동은 80회로 그 중 군관련 활동이 53회(총공개 활동의 66%)로 선전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물리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장사정포,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0mm 방사포(400여문 보유) 및 천마호 전차(40여대 보유) 성능개량, 엔진 시험 등 미사일 개발,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생산·배치, 신형지대함 유도탄 개발 및 상어급 잠수함 건조, 영변 5MW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 가동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한 기존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신무기도입 등이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 노력은 기존의 무력을 개량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군사부문에 있어서 몇몇 교류활동 외에 크게 부각될 만한 것은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 국경경비단의 방북(6.26~29)이 있었으며,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중국을 방문(7.12~14)하여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중국 전인대 상무

위원장 및 군사인사들과 회동하여 양측간 전통적 친선협조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1960년 8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각급 교류협력을 확대해온 쿠바를 방문한 바 있다(『조선중앙방송』, 11.20). 북한의 이러한 대외적 군사 행보는 친선 차원의 교류활동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차원에서 북한의 해상침투 및 DMZ 도발 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몇 차례의 NLL 침범사례가 있었으나 이전과 같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상당히 자제되어 왔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장성급 회담에서 이루어진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합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4년도 북한의 군사태세는 대미 군사적 강경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미국과의 핵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 군사적 공격의지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을 대내적 긴장상태 유지를 통한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데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도 북한의 군사태세는 보다 ‘투쟁적’인 대미 군사적 강경태세를 견지할 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중대입장을 표명하거나 핵실험 감행 또는 핵무장 관련 공식 중대선언 발표를 통한 대미,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조성, NLL 주변 해상의 무력시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핵실험 감행은 국제적 파장과 미국의 직접적인 반발여파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나 비공식적인 핵

보유 발언이나 핵무장 활동을 시사하는 선전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군사강경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대남 군사적 ‘유화책’을 동시에 펴 나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장성급 회담 재개와 같은 군사적 유화 제스처를 구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경제적 이득 추구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필요성 증대 → 남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요구 심화에 따라 남북한 군사대화를 진척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전년도의 ‘반제군사전선’ 형성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다양한 정치적 캠페인이 등장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은 ‘일전불사’ 차원의 전쟁준비태세를 의미하는 군사동원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이를 대내 체제안정화를 위하여 활용해나가면서 실질적인 군사방어태세로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전국적인 공습훈련 실시 등과 같은 군사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핵문제 관련, 남북 양측의 민족공조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확대하고 동시에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명령을 전군에 하달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군복무 기피 풍조, 탈영, 절도, 사기 등의 부정적 행태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며, 출처불상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의 단속을 위한 군대사상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주요 대외관계

가. 북·미관계

프리티처드(Jack Pritchard) 전(前) 대북교섭담당대사와 헤커(Siegfried Hecker) 핵물리학 박사 등 민간 대표단은 영변 핵시설을 방문(1.6~10)하여 북한의 폐연료봉 8,000여개 재처리 및 5MW 원자로 가동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의회 청문회(1.20~21)에서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신년 연두교서(1.20)에서 북한과 이란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의 선례에 따라 핵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2차 6자회담(2.25~28)에서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계획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안한 대북 에너지 지원계획에 대해 동참하지는 않겠지만, 이해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 계획 포기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소 완화하였다.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외무장관 회담(3.4)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한두달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은 고건 국무총리와의 회담(4.16)에서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이 빠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해 온 미국의 종교·인권단체들의 모임인 ‘북한 자유연합’은 워싱턴에서 ‘북한 자유의 날’ 행사를 개최(4.28)하고 북한인권법안의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쿠바·이란·리비아·수단·시리아 6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연례 세계테러보고서를 발표(4.29)하였다.

대통령 선거유세가 본격화되자 민주당 후보 케리(John Kerry)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구를 강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북한이 핵폭탄 6~9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로 생산했다고 주장하였다. 케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양자 협상을 갖고 남북한 통일문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5.30)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어떤 협상도 분명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공화당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북한 핵문제를 선거 이슈로 제기하자 부시 행정부는 대북협상에 유연한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측이 제안한 3단계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핵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제3차 6자회담(6.23~26)에서 미국은 보다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포함한 완전한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핵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일본 등이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보장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2단계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부인하고, 핵동결이 선언되면 미국도 대북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찰방식은 6자회담 참가국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 의회 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7.22)시켰다. 그리고 상원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통과(9.28)시켰다. 하원은 상원에 수정된 「북한인권법안」을 재통과(10.4)하여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완료 하였다.

11월 2일 선거에서 승리한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월 20일 집권 2기를 출범하여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여, 상원에서는 공화당 55석 대 민주당 44석, 하원에서는 232석 대 202석으로 공화당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한 직후 기자회견(11.4)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첩경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힘으

로써 9·11 테러사태 이후 추진해 온 공세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보수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파월 국무장관 후임으로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을 지명하였다. 새로운 안보담당보좌관으로는 신보수주의자 해들리(Stephen Hadley)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을 임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11.20)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들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내정자 및 국무부 고위관리들도 한국 국회 대표단과 회담(12.7)에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북 유화정책을 거부하는 한편, 협상과 병행하여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테러와의 전쟁 승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역점을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힘에 우위’에 입각한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핵문제에 관한 협상은 대북 강경파인 체니 부통령의 주도하에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된 부시 2기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지금까지 강·온 양면의 혼선을 빚어 온 대북정책에 관해 확고한 입장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북한인권단체에 연 2,400만 달러, 4년 동안 총 9,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공동훈련과 더불어 북한에 대

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제3국에 확산시키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급격히 선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 및 국제테러조직의 척결 등 중동지역의 민주화·안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기 이전에 미국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이 핵폐기 원칙을 수용하게 되면 핵폐기 범위와 대상, 검증방식, 동결기간, 상응하는 조치의 내용 등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하며 북·미관계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도 핵사찰 범위를 둘러싼 협상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6자회담이 핵폐기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게 되면, 미국은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고 대북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즉, 유엔의 지지를 받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높여나가면서, 북한의 반응 수준에 따라 점차 경제·군사적 압박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 김국신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북·중관계

2004년은 2003년에 비해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4.19~21)을 계기로 양국은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면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03년 8월의 1차 6자회담에 이어 2차 6자회담(2.25~28)과 3차 6자회담(6.23~26)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얻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도 북·중관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3년 만에 성사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은 물론 후진타오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9인 전원을 이례적으로 접견함으로써, 중국의 신 지도부와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중 양국은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지속과 대북 경제 지원 및 협력에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통우호협력관계는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43주년(7.11)과 북·중수교 55주년(10.6)을 기념하여 양국 사절이 상호 방문하고 축전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로동신문』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54주년(10.25) 기념 논설에서 ‘혈맹관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양국이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핵 폐기 압박과 경제체제를 극복하는데 중국의 후원이 필요했으며, 중국은 경제발전과 안보에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에 합의하여 개최된 2차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회담 참

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에너지 공급과 식량지원을 중단 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한편, 외교적 중재노력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의 일환으로 당시 국무원 외교담당 부총리인 천치천의 방북(3.8)과 닝푸쿠이 북핵대사의 방북(3.13~16) 그리고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 부장의 방북(3.23~25)이 이루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뒤이어 북한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6자회담(6.23~26)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4차 6자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양국 간의 갈등도 수면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등재를 둘러싼 북·중 양국의 경쟁이 동시 등재로 결정(7.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선민족의 슬기 넘쳐나는 고구려 무덤벽화’(『평양방송』, 8.5), ‘민족사를 실증하는 역사유적과 유물’(『조선중앙방송』, 8.9), ‘7천년 전의 시루 발굴’(『조선중앙통신』, 8.9) 등을 통해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유명 간행물인 『전략과 관리』(7~8월호)에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한다’라는 제하의 북한 비판논문이 게재되었다. 왕원중은 이 논문에서 북한을 가족세습체제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국가에 대해 중국이 지지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의 평양방문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8.20)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중국은 이 잡지를 정간시켰고, 북한도 더 이상 중국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갈등이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폭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

국은 주요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 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리자오 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방북(8.28)과 리장춘 정치국상무위원의 방북(9.10~13)이 이어졌으며, 뒤이어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의 방중(10.18~20)과 김영일 북한외무성 부상의 방중(11.9)이 이루어졌다.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도 증대되었다. 중국은 2003년 북한 접경지역의 국경경비를 무장경찰에서 15만 명의 정규군으로 교체한 바 있는데, 리위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가 국경경비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6.26~29)하여 양국 국경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국경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북한 인민무력부 부장인 김일철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방중(7.12~14)하여 양국간의 군사교류와 협력확대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김상의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차오강환 국방부장과 양국 군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에 합의(11.4)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북·중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반영되어 경제교류와 협력이 증대되었다.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원조 이외에도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4.22)에 1천만 위엔(1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원조하였고, 평양에 유리공장 건설에도 5,000만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밖에 중국의 평양국제상품전시회(5.17~20) 참가, 북·중 상품판매센터의 평양 설립(5.28), 북·중 경제무역대표단의 회담 개최(6.30) 등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9월까지 양국의 교역액은 8억8천6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의 6억3천100만 달러에 비해 40.5% 증가하였다. 이중 북한

의 대중 수입은 5억3천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8%, 수출은 3억4천700만 달러로 88.1% 증가하였다. 수출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중국의 건설 원자재 수요 증가와 가격인상에 힘입어 철강, 아연 등 북한의 원자재 수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에서는 원자재와 공업제품, 돼지고기 반입이 크게 늘고 곡물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67.8% 줄었다.

2005년도에도 2004년과 같은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당장 중요한 현안인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와 미국의 군사조치 모두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완화시키고 한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체제보장과 경제 건설에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관계를 통해 볼 때,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북·미를 중심으로 한 회담 당사국들의 의견 차이가 커서 북핵문제가 완전 타결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북·중관계도 이에 따라 부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양국 관계는 극도로 경색될 것이나, 그럴 가능성은 적으며 북·중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안보 분야에서 폭 넓은 협력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

● 전병곤 · 국제관계연구실 부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2004년 북·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교교섭을 시도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비난 회피와 교착상태에 빠진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환문제 등을 진전시켜 수교교섭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방북하였다.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정상회담(5.22)에서 두 정상은 2002년 9월 첫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 평양선언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보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피랍자의 북한 잔류자녀 5명의 일본행을 허용하였으며, 피랍 후 북한에서 사망 혹은 실종된 일본인 10명에 대해 진상 재조사를 약속했다.

이 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포기를 촉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6자회담을 활용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발사실험 동결도 재확인하여 주었다.

북한이 평양선언의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일본은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25만 톤과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은 북한 경제재해 관련법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이러한 양국간의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쟁점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만 귀국한 데 대해 일본국민들은 실망스런 느낌을 갖고 있으며, 또한 납치의혹

자 10명의 재조사를 약속 받았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어 납치가족들이 ‘최악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등, 갈등 재연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동결은 합의됐지만 핵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동시행동원칙에 근거한 일괄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첫 단계로 ‘동결 대 보상’을 제안해 비핵화로 나간다는 것이며, 핵을 동결한다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던 1965년 북한으로 도주한 미군 탈영병 찰스 켄키스가 7월 18일 신병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입국했다. 켄키스씨는 북한에 납치됐다 일본으로 돌아온 소가 히토미의 남편이다. 켄키스씨의 일본 귀국으로 납치문제가 풀리는 조짐을 보였으나 아직도 북한에 납치된 이후 행방불명 상태인 10명의 행적조사가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에 납치됐던 13세 일본 여중생 요코다(横田) 메구미가 유골로 귀환(11.15)하자, 일본에서는 대북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여론이 비등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북·일 실무협약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점도 작용하였다. 특히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확인(12.9)된 이후 일본의 대북여론이 강경해짐에 따라 양국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쟁점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송금금지가 포함된 대북경제제재 조치(11.15)를 승인하기도 했다. 또한 자민당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보조금과 재산세 경감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욱이 일본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와타나베(度邊)민주당 의원은 “현재 나가와(中川) 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법제국에 지시해 법안 초안을 만들도록 지시해 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한은 일본의 2004년 판 ‘방위백서’가 제기한 ‘북한위협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논평(7.21)을 통해 “일본이 지역의 정세불안을 북조선(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와 연결한 것은 이를 통해 노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본의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력증강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일본의 마치무라(町村) 외상은 방한(11.4)하여 “부시 대통령 재선에 따라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6자회담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대화·압력 병합’정책을 계속 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북·일관계 개선의 관건인 납치의혹 해소문제와 핵·미사일문제로 일본 내 대북여론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에도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6자회담의 개선 여하에 따라서 북·일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 김영춘 ·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관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북·러 양국은 2004년에도 정상간 친서교환과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선린협조관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북·미간 중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북·러는 북한철도 현대화 및 TSR-TKR 연결 문제에서 진전을 보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2회 생일을 맞이해 카를로프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과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친선모임(2.13)을 가졌고, 푸틴 대통령은 축전(2.16)을 보내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지원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재선된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3.15)을 보내고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확대를 표명하였으며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게도 유임 축하편지(4.2)를 보냈다.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내무성협주단의 평양 공연시(6.11) 김정일 위원장은 단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는 절정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울 방문에 이어 방북,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7.4)을 가졌다. 양자는 양국 지도자들 간의 3차례 회담으로 고위급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간 친선협조관계 강화, 국제문제와 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연방 외무부 사이의 2005~2006년도 교류계획서가 조인되었다. 또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양국간 협력과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푸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 논의를 위한 남북한·러 3국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7.5)하였다.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이 북한 최고 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9.12~14)하여 김정일 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중요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로노프 의장은 김일성 대학 연설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북·러 양국의 각 분야 협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군사 면에서 북·러 양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두만강 지역의 국경선 획정에 합의하고 국경조약 의정서에 서명(2.9)하였다. 1990년 9월 소·북한은 국경조약에 합의했지만 두만강 하구와 동해 안에 이르는 40.3km 구간에 대한 접경선 획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1998년 러·중·북한은 두만강 중간선을 경계로 국경선을 획정하기로 했지만 매년 강의 모습이 변화돼 국경선을 획정하지 못했었다. 도쿄에서 열린 20여 개국 아·태 연안국가 국방장관 회담에서 트루브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일본이 여러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 약 2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말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위협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6.5) 하였다. 3차 6자회담에 러시아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알렉세예프 본부대사는 북핵 계획과 관련, 동결대상과 검증 및 보상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3개월 내 핵 프로그램 동결 시한은 적절치 않다고 이타르-타스 통신과 회견(7.14)에서 밝혔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

센터장은 양강도 폭발사고(9.9)와 관련, “북한에는 실제로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이 핵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일 지 모른다”고 말했다(9.13).

경제면에서, 북한 노동자 약 1만 명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350달러의 저렴한 월급을 받고 건설, 농업, 벌목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북한 노동자 할당분이 2003년보다 500명 증가된 2,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아무르 지역에 1,500여 명의 벌목공을 파견하고 있는데 북·러 양국은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간 협력협정을 5년 연장(4.28)하는 한편, 아무르 지역에서 향후 2년 간 목재 조달량에 대한 의정서에도 서명하였다. 4월 룡천 폭발사고 직후 러시아 비상대책부는 항공기를 통해 비상식량과 의약품, 텐트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러시아 극동 연해주 당국은 6월 중순 특별열차 편으로 화차 6량 분량의 쌀을 비롯한 식량과 건축자재를 전달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조 아래 곡물 35,000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6.25) 하였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시(7.4~5) 북한은 37억 루블(약 1,400억 원)의 채무탕감을 요청했으나 그는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TSR과 TKR 연결과 관련, 두만강-나진-원산-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802km)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2001년 합의한 바 있는 북·러 양국은 7월 열린 북한 청진철도국과 러시아 극동철도국 국장간 실무회의에서 나진-हत산 철도 현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낙후한 북한철도 시설을 복원해 TSR과 연결하는 데 2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북한의 철도현대화 계획에 이미 4억 루블(1,300만 달러)을 투입하였다. 이외에 러시아 연해주는 필요시 대북 전기공급을 위해

북한 국경으로 연결되는 송전선을 건설하고 있고, 사할린-하바로프스크 구간에서 건설되고 있는 가스 수송관을 블라디보스톡까지 확장하여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북·러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선린협조관계를 지속하고 긴밀한 협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핵관련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는 러시아의 경제회복 추세에 따라서 북·러 간 철도연결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노동력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 여인곤 · 국제관계연구실 실장

마. 북·EU관계

2004년도 EU와 북한과의 관계는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EU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4.15)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대북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북한과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EU는 최근 채택한 ‘유럽안보전략’(ESS)에서 ‘북핵 프로그램은 근거리 위협과 마찬가지로 EU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 해결 전까지는 대북경협 확대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하였다. 즉 EU의 대북정책은 WMD 및 인권문제와 관련한 강경입장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한 유화적 입장이 공존하는 양면접근(two-track approach)으로, ESS, 인권결의안 등과 관련, 공식적 차

원에서는 EU의 대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으나 이것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ESS는 유럽안보의 일선을 유럽차원을 넘어 외부로 확대함과 동시에 위기발생 이전의 ‘예방적 개입’을 통한 심각한 사태 방지를 제안해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한층 공고히 했는데, UN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을 제시해 다자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상정·채택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EU의장국인 아일랜드와 미국, 일본 등은 고문, 강제노동,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지를 촉구한 반면, 중국은 북한의 개선 노력, 쿠바는 서방의 이중 잣대를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당사국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것으로 미국이 배후에 있으며 EU는 이라크 등의 다른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면서 미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즉,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EU측이 검증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하도록 인권위가 요청한 문구가 추가된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핵심 사안에 해당한다.

대북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후 북한은 영국 각료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북한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에게 강제 노동수용소로서 노동

교화소를 인정하였다. 라멜 차관은 런던에서 방북 관련 기자회견(9.16)을 열고 북한이 최초로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우리
에 비해 인권문제에 대해 훨씬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인했
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에는 어떤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미
국 등이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던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노동교화소 등 인권문제를 부분적
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유화적 태도
를 표명하여 악화된 국제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리안 프린스 주한 EU 대사는 6월 10일 “EU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북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원한다”며 “이같은 입장은 굳
건하다”고 말했다. 프린스 대사는 “핵으로 인해 한반도에 발생하는
군비경쟁은 매우 소모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린스 대사
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소유 여부부터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으며,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북핵문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모든 참여주체가 한 걸음
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지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자프로세스 자체가 진보
적인 것이며, EU도 안보와 경제원조 차원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
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국제사회는 북한
을 포용하고 교역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EU는 한
반도 비핵지대화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에 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10월 핵 파문으로 교류가 미진했던 EU와의 인적·물적 교
류가 2004년도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3월 최태복 최고인

민회의 의장이 체코와 영국 등을 순방한 데 이어 궁석웅외무성 부상이 영국과 불가리아 등을 방문하였다. 또 폴란드 외무부 대표단(5.15~18)과 독일 연방의회 요하네스 플루그 의원(5.11~15), 영국 글로벌 그룹 조니 혼 회장(5.4~8) 등도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해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교류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밖에 북한은 제7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5.17~20) 소식을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에 소개하고 중국, 말레이시아, 시리아, 태국, 이탈리아 등의 전자·기계·전력설비·경공업제품 생산 기업 등을 초청해 수출·입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영국 석유회사인 ‘애미넥스’(Aminex)는 2001년부터 북한과 협상을 벌여온 결과 지난 6월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년 기간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채굴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탈리아의 유력 경제지(II Sole 24 Ore)는 9월 25일자에서 조사단이 “북한에 대해 매우 생소하고 아직 국가위험도나 정치안정성에서 불안한 점이 많지만 물류와 교통분야에서는 투자 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EU는 또 지난달 초 평양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처음으로 열고 북한의 경제 현대화 과정, 특히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1월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유럽기업 및 단체와 북한의 경제협력사업을 돕기 위해 ‘코리아-유럽 경제기술서비스’라는 협력 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했고, 10월에는 북한과 영국의 마이클 헤이 변호사가 합작사 형태로 최초의 외국 로펌인 ‘헤이 캄브 & 어소시에이즈’를 설립했다. 이외에도 EU는 4월 발생한 용천 열차폭발 사고의 구호사업을 위해 20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6월에도 대북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910만 유로 규모의 원조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원이 북한에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집행위원회 평양 사무소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번 지원으로 최고 1천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EU와 교류협력 강화에 나섰던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응해 유럽과 경제교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경제난을 해소하고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는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북한이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선제공격과 인권문제 압박 등을 유럽과 교류 강화를 통해 돌파해 나가려는 정치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유럽 기업의 교류 움직임이 북한 뿐 아니라 유럽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은 북한과 경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공산품의 유럽규격이 발붙일 수 있게 하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도에도 북한과 EU간의 관계는 2004년도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에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지만, 핵문제 해결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될 것이며, 경제교류협력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황병덕 · 평화안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대남동향

2004년 북한의 대남동향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상반기에는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1.19)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대남공세와 함께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10주년을 기점으로 한 하반기에는 격렬한 대남비난과 함께 남북대화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상반기 대남동향의 핵심은 민족공조, 특히 당국간 공조의 요구였다. 제13차 장관급 회담(2.3~6)에서 북측 단장은 “민족공조에서 기본은 책임있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라고 강조하고, 남북관계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범은 미국이므로 미국에 반대하면서 남북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북한은 당국 공조의 과제로서 핵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지지와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지 않는 우리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규모의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핵소동에 가담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규탄(『평양방송』, 3.8)했다.

북한은 당국간 공조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탄핵정국이 벌어지자 우리 정국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였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탄핵소동’이 남한 내부 문제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미국과 그 하수인들인 보수야당에 의한 의회 쿠데타’로 비난(『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3.14)했다. 동시에 총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을 심판하고

진보개혁세력에게 표를 주어 정치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선동(『로동신문』, 4.12)했다. 이러한 동향은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민심에 동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세력이 득세할 경우 경협에 소극적이고 핵문제 해결에서도 대북 압박책을 구사할 가능성을 경계한 탓으로 보인다.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자 선거결과를 “6·15 공동선언의 승리이며, 인민대중이 반민주세력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촉구(『로동신문』, 4.19, 『조선중앙방송』, 4.20)했다. 반미·자주화 투쟁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저지, 미군철수 등을 관철하도록 요구(『조평통』 대변인 담화, 5.14, 『평양방송』, 5.19, 『법정학련 북측본부』 성명, 6.7, 『민화협』 성명, 6.9, 『조선학생위』 성명, 6.11)했다. 이는 우리 사회내의 ‘남남갈등’과 반미 감정에 편승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미공조를 이완시켜 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남조선의 민심은 반북대결에서 연북화합으로,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통일신보』, 6.5)하고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 대 남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으로 되는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로동신문』, 6.15)했다.

이와 같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남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북한은 ‘민족공조’라는 주장 아래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당국 차원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학술회의’(평양, 2.24~2.28) 및 ‘2004년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평양, 5.1),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5.3) 등을 개최했고, 남한에서 개최된 ‘우리민족대회’(6.15)와 ‘국제토론회’(6.14~15) 등

에도 고위급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핵문제에 관해서도 남북한간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2.6)했고 실제 3차 6자회담(베이징, 6.23~26)에서는 우리의 제안과 역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피해 왔던 군사회담을 수용하여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에도 합의(6.4)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기점으로 반전되었다.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맞아 조문하려던 우리측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게 되자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7.8)와 「민화협」 대변인 담화(7.9)를 통해 우리 정부가 방북을 불허했다고 주장, 사죄를 요구하면서 반인륜적 처사를 저지르는 자들과는 내왕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조선중앙통신』, 7.8, 『평양방송』, 7.9)했다. 이어 북한은 예정(7.13)되어 있던 제5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하지만 이 무렵만 해도 제10차 이산가족상봉 행사(금강산, 1차: 7.11~13, 2차: 7.14~16)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등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한이 조문불허에 대한 사죄를 계속 요구하는 가운데 동남아로부터 탈북자들이 집단 입국(7.27)한 일이 발생한 때부터였다. 이에 대해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끌고가는 유인납치테러범행을 저질렀다는 서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7.29)했다. 성명은 미국이 「북한인권법안」을 하원에서 통과(7.21)시킨 것에 추종하여 우리 정부가 이같은 일을 저질러 북한의 국제적 권위와 이미지를 훼손해 보려는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조국전선」은 입국한 탈

북자들에게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탈북자들은 강제로 끌려간 동포형제라면서 귀환할 것을 회유(『평양방송』, 8.18)했다. 이는 탈북자 집단입국을 우리 당국의 ‘납치행위’로 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었다.

북한의 항의는 곧바로 제15차 장관급 회담(서울, 8.3~6)의 거부로 나타났다. 나아가 『조평통』·『민화협』 대변인은 ‘작전계획 5027-04’ 및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 대해 미국 및 남한 군부가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조선중앙방송』, 8.7, 중·『평양방송』, 8.10~13)했고,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8.8), 『로동신문』 논평(8.10) 등을 통해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8·15 남북공동행사가 북측의 특정단체 참가 요구로 무산되자 『민화협』은 성명(8.13)을 통해 우리 정부가 범민련과 한총련의 행사참가를 불허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행위는 ‘6·15 공동선언’의 전면 부정행위라고 주장(『조선중앙방송』, 8.14)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해 우리 당국이 차별한다는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내의 대북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미감정에 호소하여 대북여론을 분열시켜 보려는 움직임은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8.19)를 통해 미국이 개성공단건설사업에 전략물자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8.19)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북한은 미국이 남북 관계를 차단하고 지배권을 유지해 보려고 개성공업지구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 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 남조선 경제인 등 각 계각층 인민들이 반미·자주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평양방

송』, 9.6)했다.

북한의 트집과 비난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9월초 우리의 연구 목적 핵관련 실험이 문제되자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9.16)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에는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조선중앙방송』, 10.3)했다. 또한 우리측의 ‘DMZ 세계 유산등록’ 추진과 관련하여 “상식 이하의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조선중앙방송』, 10.5)했고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10.12)을 통해 ‘충무계획’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면서 백지화와 사죄를 요구(『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10.12)했다. 우리 정부의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11.12)에 대해서도 ‘6·15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범죄’이며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를 전면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에 대해 엄격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11.20)했다. 이같은 북한의 비난과 반발은 탈북자 집단 입국,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등으로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반통일성’을 부각시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체제결속 및 대남 압박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우리 정부에 대해 비난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을 채택(9.21)하고, 이산가족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위한 실무접촉(11.25~27)을 제의하여 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2004년을 마감하면서 북한은 다방면에서 민족공조사업이 이루어

진 점을 남북관계의 성과로 지적(『조선중앙통신』, 12.23)하기도 했다.

2005년에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요구하는 공세적 대남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은 우리 사회내에 팽배해진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미국을 화해·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시켜 한·미공조를 이완시키는 한편, 대북 경험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에도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미공조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핵문제에 연계시키지 않는 경험을 주장할 것이다.

2005년은 북한으로서는 광복 60주년, 창당 60주년, 선군정치 시행 10주년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로서 무엇보다 주민생활의 개선 등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해이다. 남한 이외에 경제적 지원을 해 줄 나라가 없고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도 남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005년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본단지 1단계 100만 평 건설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남북관계가 순조로워야만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05년에는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주요 의제로 한 장관급회담 등 남북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것이고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교덕 · 북한연구실 실장

III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장관급회담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2.3~6)되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상의 무력충돌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하여 기존의 영관급 군사채널과는 별개로 이보다 격이 높은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핵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여 6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대화채널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남측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금년도에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북측은 지난 한해 개성공단건설 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우리 당국이 개성공단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외 제9차 이산가족상봉의 3월 말 실시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의 본격 추진에 합의하였고,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평양에서 개최(5.4~7)되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시기(5월 중)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분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남측이 장성급회담 개최는 이미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인 만큼 다른 조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북측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회담문화 형성에 진전을 보였다. 셋째,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쌍방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그 외 제10차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하였고, 제15차 회담일정에 합의하였다.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에 대한 조문파견 문제, 대규모 탈북자의 입국문제 등으로 계획되었던 15차 장관급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장성택을 포함한 일부 고위관리의 숙청과 관련한 내부 사상 점검 및 사상교육 강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이 어느 정도 토대를 닦은 점, 미국 차기정부의 출범 탐색 등도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포함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회피한 원인이었다.

내부통제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미외교를 정리한 북한은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5년 초에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쌀과 비료의 지원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을 맞이한 북한이 전반적인 대남정책을 재조정하여 민족공조에 입각한 남북관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급회담은 대립하는 양 체제가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의 포괄적 분야에서 의제를 설정하여 대화한다는 점, 그리고 회담에서 차기 회담을 결정한다는 점 등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현 OSCE)의 초기와 비슷한 형태를 띤 대화이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의제, 예를 들어 북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의제의 포괄성과 연계성,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일관성·지속성 등을 통해 장관급회담의 정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손기웅 ·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남북장성급회담

2004년 5월말과 6월초 2차례에 걸쳐, 남북간 직접 군사접촉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후 3년 8개월 만의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접 회담이다. 1차회담은 5월 26일 금강산에서, 그리고 2차회담은 6월 3~4일 설악산에서 열렸다.

그동안 남북간 군사실무접촉이 있었지만, 군사실무접촉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이라기 보다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연결을 위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2004년의 남북장성급회담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충돌 방지 대책’ 및 ‘군사분계선(MDL) 선전·비방행위 금지’와 관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에 의거, 남북 양측은 쌍방 함정의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의 경우, 상호 대치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156.8Mhz,156.6Mhz)을 활용, 상호 교신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안전문제, 군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남한 당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고려할 때,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의 이와 같은 남북한 군사당국자들간 직접 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커다란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요

소 이면(裏面)에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북한은 대남전략의 기본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협상과 합의과정을 통해 대남전술상의 다양한 변화 곧 위장전술, 2중전술, 고도의 심리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NLL침범사건(7.14)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04년 7월 14일 북한 함정은 NLL(Northern Limit Line; 서해북방한계선)을 무단 침범·남하하면서, 우리 해군이 ‘상호교신망’으로 보낸 3차례 경고 무전에 무응답한 채 남하를 계속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 이후에야 “중국 어선이 남하하고 있다”는 허위 송신을 보냈으며, 상황 종결 이후에도 NLL을 넘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군의 북함정 NLL 월선 주장에 대해서, “남한 군 당국의 허위이자 날조”라고 주장하였다.

NLL에 관한 한, 남북장성급회담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곧 북한은 현재의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나름의 새로운 중간선(中間線)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서해교전 이후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한 바 있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라는 것을 선포,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를 계속해왔다. 우리측의 ‘우발충돌방지’ 요구에 대하여 북한이 충돌의 ‘근원’인 NLL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방한계선은 “법적타당성도 없는 유명선”이라면서, NLL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북한의 7월 NLL 침범 사건 이후, 남북장성급회담의 성과와 실효성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자칫, 실천되기 어려운 ‘상호교신망’ 합의로, NLL 논쟁을 공론(公論)화시키고,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와 위장된 북한의 교란전술에 의해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남북장성급회담 합의 이후, 북측의 NLL 침범 횟수가 합의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7월 사건 이후,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으로부터 경고통신과 함께 10발에 걸친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사건(11.1)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한 후,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40분만에 북상한 사건(11.9)이 발생하였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2차회담 이후 속도를 내는 듯 하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작업은 지난 7월 14일 북한 함정의 NLL 침범 사건 이후, 일단 교착상태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남한 해군이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월선을 막기 위해 경고용 함포사격을 가한 것 등을 문제삼아 7월 19일로 예정됐던 장성급 군사 3차 실무회담에 불응하였고, 아울러 2차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뤄지던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물 및 선전수단 철거 작업도 중단한 상태이다. 물론 남북 양측간 통지문 교환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장성급회담에 대한 선부론 평가는 아직 경계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남북간 직접 군사접촉에 관한 한, 긍정적-부정적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기 기술한 부정적 측면과 함께, 남북 군사당국자간 상호통신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성과달성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도 충돌 부담이 많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의지에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로 확고히 대처하면서, 동시에 유사시 상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남북간 무선통신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이는 위기극복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NLL을 인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NLL을 포함하는 남북간 군사현안에 대하여 남북 군사당국자가 직접 만나 협의·논의하는 채널의 유효성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대남 정책 및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남북 장성급회담에 관한 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부정적인 요인이 지배적인 상태로 계속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 홍관희 · 평화안보연구원 실장

다. 경제분야 회담

2004년 남북한간 경제분야회담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1월에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과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가 각각 개성에서 개최되었고, 2월에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과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이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3월 서울에서 제8차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어 6월 평양에서 제9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6월에는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1.27~29)은 3일간 출퇴근회담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제2~4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하였다. 같은 기간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개최(1.27~29, 개성)하여 제1차 회의(2003.12.17~20)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청산결제의 거래방식, 신용한도, 이자율, 청산결제 대상과 한도, 청산결제은행의 일반결제업무 수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 안에 채택하기로 하였다. 2월 남북 양측은 개성에서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및 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개최(2.25~26)하여 쟁점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합의서(철도·도로) 및 공동보도문(해운)을 채택하였다.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서울에서 개최(3.2~5)되어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이 타결되었다.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1만 평 시범단지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 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로·철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남과 북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004년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

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의 문서교환방식의 채택 및 4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그리고 남측 경제시찰단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상호방문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평양에서 개최(6.2~5)되었다. 지난번 8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이 타결되었다. 합의서 1항에서는 1단계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제품생산을 하도록 하고,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터간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2항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간을 2005년에 동시에 개통하고, 이에 앞서 가능한 철도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은 2004년 10월경 진행하기로 하였다. 3항에서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조속히 채택·발효시키기로 하였다. 4항과 5항에서는 이미 합의되었거나 서명된 합의서의 조속 발효 및 관련 부속 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하고 민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항에서는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타결(2.26)된 해운 부속합의서를 남북은 서명·교환(6.3)하였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가 개최(6.24~25, 개성)되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개성공단건설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 통신, 용수 및 폐기물 처리와 통관, 검역 등 제기되는 당면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향후 개성공단개발사

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실무접촉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산결제 은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6.30~7.2)에서는 10월 중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설계,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관련 기술지원 등을 협의하고 5개항에 합의하였다.

7월 이후 남북관계는 북측의 당국간 대화 및 일부 민간교류 연기 등으로 소강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정체는 김일성 10주기(7.8) 조문문제, 북한인권법 미 하원 통과(7.21), 대규모 탈북자 입국(7.27~28) 등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예정되었던 해운협력 실무접촉(7.13~1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8.31~9.3) 등 경제분야 회담은 북측의 불호응으로 연기되고 있다.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8.3~6)과 8·15 민족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도 개최되지 않았다.

- 최수영 ·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04년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6자회담의 성과 미약, 김일성 10주기(7.8) 조문 문제, 북한 인권법 미 하원 통과(7.21), 대규모 탈북자 입국(7.27~28) 등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전반적인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7월 이후 기업인의 방북이 전면 중단된 채 4개월이 지나, 북한과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상은 물론, 기존의 사업에 대한 운영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남북교역량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만,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그나마 활기를 띠는 양상을 나타냈다. 3대 남북협력사업의 하나인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또한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시범공단조성에 따른 15개 기업의 진출로 2004년 10월까지 총 2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남북교역>

2004년 1~10월중 남북교역은 총 5억 4,807만달러로 전년 동기 5억 9,120만 달러 대비 7.3%(4,313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중 반입액은 2억 733만 달러로 전년동기 2억 3,528만 달러 대비 11.9%가 감소했다. 주요 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건조수산물, 조개류, 고사리, 버섯), 섬유류, 철강·금속제품(아연괴) 등이었다. 반출액은 3억4,074

만 달러로 전년동기 3억5,592만 달러 대비 4.3%가 감소했다. 반출 품목은 대북 지원용 화학공업제품(비료)을 포함, 농림수산물(쌀, 밀가루) 등과 위탁가공원부자재인 섬유류가 주를 이루었다.

이로써 2004년 1~10월중 명목교역수지는 1억3,340만 달러로 남한이 흑자이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1억3,329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총 420개 업체(위탁가공업체: 109개)이며, 품목수는 580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03개)였다.

한편, 거래성 교역의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1~10월중 거래성 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교역)은 2억8,131만 달러(반입: 2억730만 달러, 반출: 7,401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6%가 감소했다. 거래성교역이 전체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51.3%였다. 거래성 교역에서도 상업적 매매거래는 1억3,648만 달러(반입: 1억2,107만 달러, 반출: 1,541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5%가 감소했다. 상업적 매매거래가 전체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24.9%이며, 거래성 교역액에서는 48.5%를 차지했다. 반면, 위탁가공교역은 1억4,483만 달러(반입: 8,623만 달러, 반출: 5,8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1%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교역액의 26.4%, 거래성 교역액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10월중 비거래성교역은 2억6,676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교역액에서도 4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이 6,21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3.7%가 증가했다.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의 비중은 전체교역액의 11.4%, 비거래성 교역액의 23.3%에 달했다. 주요 협력사업용 물자는

경수로사업 물자 45만 달러,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3,371만 달러, 기타 협력사업 물자 2,794만 달러 등 이었다.

한편,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은 2억466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가 감소했다. 대북지원 물품이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 비거래성 교역액에서의 비중은 76.7%를 차지했다. 이중 순수 인도지원물자는 1억5,115만 달러(대북 비료지원: 5,102만 달러, 기타 지원물자: 1억3만 달러), 식량차관 2,737만 달러,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차관 제공 2,613만 달러였다. 대북지원이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식량차관 중 국내산 10만 톤만 반출로 집계되고 수송중인 외국산 30만 톤(90,000천 달러)은 미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2004년 남북교역 변화 추이

(단위: 만 달러)

	2003.1~10	2004.1~10	변화량(%)
총교역	5억 9,120	5억 4,807	-7.3
반입	2억 3,528	2억 0,733	-11.9
반출	3억 5,592	3억 4,074	-4.3
교역수지	1억 2,066	1억 3,340	10.6
거래성교역	3억 4,139	2억 8,131	-17.6
상업적거래	1억 6,455	1억 3,648	-17.5
위탁가공교역	1억 7,684	1억 4,483	-18.1
비거래성교역	2억 4,981	2억 6,676	6.8
협력사업물자	4,040	6,210	53.7
대북지원	2억 0,941	2억 0,466	-2.3

자료: 통일부 자료 자체 취합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대북 교역이 감소한 요인은 주로 거래성 교역중 상업적 매매거래의 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명태 등 건조수산물 1,820만 달러, 녹두 151만 달러, 녹용 121만 달러, 금 1,142만 달러 각각 감소)한 데 기인하며, 국내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탁가공교역의 80%를 차지하는 섬유류 교역이 부진했던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성 교역에 있어 건명태는 지난해까지 포괄승인 품목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승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쿼터(연간반입한도량 2천 톤)로 제한한 것이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외 식량차관 중 외국산 30만 톤이 미집계되고 있는 점도 감소요인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1단계 100만 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8천 평을 조성, 연내 입주를 추진 중에 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심사판정이 마무리된 13개 기업에 대한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반출물자에 대한 판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공장건설 등 입주절차를 진행, 지난 12월 시제품을 생산(리빙아트)한 바 있으며, 기타 일부 기업도 생산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략물자 판정의 경우, 내부 통제체제 구축, 관계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를 새로이 발족하는 등 전략물자심사체제를 구축했다. 시범단지 15개 기업의 총투자 금액은 760여억 원으로

이는 1995년 이후 10년간 대북 총투자금액(금강산, 경수로 제외)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남북한은 금년 10월 도로 개통 및 철도 시험운행(개성-문산, 온정리-통일전망대)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7월 이후 단절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경의선 남측구간 철도와 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북측구간은 철도의 경우 궤도부설이 완료되었으며, 도로는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동해선의 경우 철도는 남쪽구간이 궤도부설공사가 진행 중인 반면, 도로는 포장공사가 완료되었다. 반면 북측 구간은 철도의 경우 본선 궤도 부설이 완료되었으며 도로도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경의선 도로가 개통될 경우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인원과 물자 수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로 이용해오던 임시도로 대신 본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강산관광 등 동해선 육로 이용의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되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실시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어 사업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관광상품의 다양화로 2004년 7월부터 월 3만 명을 상회하는 관광객을 맞고 있다. 북한이 특구개발을 위한 하위규정(개발, 기업창설, 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노동, 외화관리, 광고 등)을 추가로 발표(5.26, 5.29)함으로써 본 지역 개발을 위한 여건도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구내 가족호텔 건설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득해, 육로관광 이후 부족한 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중부푸드뱅크(주)의 투자 유지를 통해 호텔급 수준의 가족호텔(총 97객실, 3층 3개동, 4층 1개동)을 건설, 2005년 상반기(5월경) 안에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경수로사업은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대두로 KEDO 집행이사회는 1년간 일시중단이 결정(2003.11)된 이후, 다시 금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정이 발표되었다. 경수로사업의 장래는 중단기간 만료 전에 집행이사회에서 검토되고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전도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및 현장 밖에서의 사업의 보존 및 유지 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KEDO는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2004.3)에 따라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의정서 준수 등 협조관계는 유지, 장비반출금지조치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2005년 남북경제관계는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정치·군사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2004년의 경색 국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의 재선임으로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의 새로운 중대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한내 대북 경협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는 17대 여대야소의 원구성으로 대북 협력 친화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대북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치중,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발판으로 작용하지 못한 점은 200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를 압도하는 상

황에서 경협활성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부의 상황도 남북 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2년 반이 경과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성과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북한 경제를 압박, 애초 목표한 생산의 증가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남 공조적 자세를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시범공단이 가동함에 따른 물자의 교역과 협력사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들어 추진된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 시범공단 건설이 추진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는 물론, 동남아로 수출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 지정,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합의서 작성,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 시범단지 조성 및 착공, 입주기업 선정 등은 개성공업단지를 통한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향후 임금 및 토지 이용 등 공단 운영과 관련 남한의 의도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기한인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이 남북한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6년 3월까지 현대아산은 9억4,200만 달러를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지불된 금액은 5억 달러 미만인 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남북한의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형편이다. 관광대가 지불에 대한 북한

의 양해가 이루어질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재 부족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확충하고, 골프장 건립 등 새로운 각도에서의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자간 협력사업인 철도·도로 연결도 대체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교역 분야에서도 남북위탁가공사업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서의 투자협력사업이 수익성을 담보하기에는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는 더욱 소극적일 것이다.

● 김영윤 ·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나. 사회분야

2004년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지속되어온 활성화 추이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북핵문제의 교착상태라는 근본적 한계와 아울러 김일성주석 10주기(7.8) 조문불허, 탈북자 집단입국(7.27~28), 북한인권법 미 하원통과(7.21)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2004년 상반기의 경우 하반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추진되었으나, 김주석 조문문제가 제기된 7월 이후에는 당국간 대화와 아울러 민간교류 등이 전반적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8·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을 비롯해, 8월 평양과 백두산 등에서 남·북 작가 260여명이 참석하여 열기로 했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등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와 같은 소강국면에도 불구하고 학술, 체육분야의 상징적 공동행사가 성사되는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기본적 모멘텀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행사는 2003년까지 방북행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2004년의 경우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을 동반한 방남 행사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일본 과거청산 요구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5.20~24, 9명), 근현대 민족운동과 관련된 남북공동학술회의(6.2~5, 9명), 6·15 공동선언 4주년 남북공동행사(인천, 6.14~17, 100명), 국제 철도심포지엄(6.17~18, 7명) 등).

학술분야의 경우 남북 역사학자들이 참가하는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등록 기념 공동사진전 및 학술토론회’가 금강산에서 개최(9.1~12)되어 “고구려사를 지켜내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또한 정신문화연구원과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변대 민족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4회 남북공동학술회의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렸다(6.4). ‘근현대사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일본의 우경화’를 주제로 대회는 2003년 북한 백두산 대회에서 이 학술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북한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서울, 6.17~18) 참석을 위해 북한의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남한을 방문, 심포지엄행사에 고속철(KTX) 시승과 국내 철도제작업체를 견학했다.

남북한간의 공동민족행사의 경우 ‘6·15 우리민족대회’가 인천에서 개최(6.14~17)되었다. 2002년 금강산 대회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로 남북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 남측 인사 1천200명, 북측 인사 103명, 해외동포 50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처음으로 총련계 재일동포들도 참가하였다. 동 대회에서는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은 「민족대단합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는 정례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교육자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진행(7.19)되었는데, 남북의 교육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분단 이후 이것이 처음이었다. 동 대회에는 남측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단 등이, 북측에서는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대표단이 각각 참가했다.

체육분야의 경우 아테네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지속시켰다. 남북한은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8.13)에 이어 남북한 선수단 임원진의 잇단 회동과 탁구 선수들의 남북 합동훈련으로 남북 체육교류를 확대해나갔다. 특히 북한측은 장기적인 스포츠과학연구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학술차원의 남북교류를 제안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북스포츠 교류가 실무회담 차원을 넘어 순수 스포츠과학 분야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종교분야의 경우 남북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신계사 대응보전 낙성식(11.20)이 거행되었다. 신계사 복원은 남북 합의에 따른 공동프로젝트로서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된 2000년 이후 지표조사와 실행합의서 체결에 이어 착공(2004.4) 5개월 만에 1차로 대응보전이 낙성됐다. 신계사 복원은 향후 4년 동안 남한의 예산과 기술로 사찰 전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신계사는 남북한 공동의 문화재 복원과 통일 기원의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의

미를 지니게 된다.

이외 남북한 및 국제단체가 참가한 교류협력도 성사되었다. 북한대표단이 참가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5.20~22)되어, 일제 과거사의 궁극적인 청산을 위해 협의회의 역할 확대 및 남북과 일본이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북한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실리추구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바, 과거의 경우처럼 외교안보적 사안의 발생시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 왔다. 따라서 2005년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지속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실리추구적 자세의 견지와 아울러 6자회담 및 대미교섭에서의 유리한 국면조성을 목표로 ‘민족공조론’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바, 상징적 분야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남북한 통일단체들이 내년 6·15 기념행사는 평양에서, 8·15 통일행사는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금강산, 11.25)한 바, 2005년의 경우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3·1절, 6·15, 그리고 8·15 등 민족적 상징성을 기념할 수 있는 사안을 계기로 대형 남북공동행사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핵문제의 타결이 내년 중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구체적 조치의 실현 및 탈북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급격한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한범 ·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인도주의 사안

가.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하여 왔다. 2004년 유엔인도지원조정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한 제10차 대북 통합지원호소액은 2억2,122만 달러(2억879만 달러로 수정)였으나, 2003년 12월 현재 실제 지원 및 지원 약정액은 1억1,253만 달러에 불과하여 8,353만 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원목표액의 60%만이 달성된 것으로, 2002년의 89.7%에 비하면 2003년 58.0%에서 보듯이 2년 연속 저조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항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이후 북핵문제로 인한 지원환경 변화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북지원 확대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액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이르며, 보건(5.0%), 농업(2.3%), 식수와 위생(1.2%) 순이다. 국제사회는 대북 긴급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북핵문제 및 북한당국의 협력부족으로 인해 개발지원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3년과 같이 식량지원에 대한 호응은 감소하고 있으나, 보건, 식수 및 위생, 교육 분야 등에서 대북지원은 보다 확대되었다. 북한당국이 8월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을 통한 통합지원호소(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2005년 대북 통

합지원호소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05년 통합지원호소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이 대규모 개발지원을 선호하면서, 소규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정운형 대외처장은 국제지원단체에 북한 당국이 유엔의 2005년 대북 지원 합동호소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장기화된 긴급 인도적 지원의 지원형태 전환 필요성, 안보상 감독 및 현장접근요구 수용 어려움 및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정서 고려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감독 및 현장방문 절차의 단순화와 상주인력의 감축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양자 간 지원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지역단위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이나 개발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호소 거부에 대해 북한 내 상주기구들은 분야별 조정회의를 통해 대북지원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분야별로 보면 2004년도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 1억 6,551만 달러(정부 5,730만 달러, 민간차원 1억821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유엔기구를 통한 통합지원, 개별국 직접지원, 국제 NGOs를 통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총 3억3,128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는 국내 대북지원액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1억 6,577만 달러)이 모두 다소 증가하였으며, 우리의 지원액은 전체의 49.9%를 차지하였다. 국내의 대북지원액은 전년도와는 달리 일반구호(5,623만 달러)와 농업복구분야(6,034만 달러)가 다소 감소하고, 보

건의료분야(4,894만 달러)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원품목은 용천열차 폭발사고의 긴급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포함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료 30만 톤, 식량차관 40만 톤, 옥수수 10만 톤, 민간차원의 밀가루, 종자, 병원현대화를 위한 물자, 농기계수리 물품, 의류, 의약품, 의료기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9.10 제정)에 근거하여 2004년도에도 북측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23개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25개 사업에 대해 98억6,7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승인하였으나, 7월 이후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중단됨에 따라 기금집행비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6년 차 대북 비료지원의 일환으로 비료 30만 톤을 지원했으며, 매 항차별 4명의 인도요원이 동행하여 인수·인도를 확인하였다. 정부는 전년도와 비슷한 방식과 규모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즉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 톤 지원을 약정하였고, WHO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약품 및 장비(66만 달러), 용천재해의약품(20만 달러), UNICEF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사업(50만 달러) 등을 각각 지원하였다. 또한 2004년도에도 대북식량차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국내산 쌀 40만 톤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현장분배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또한 식량차관이 육로로 운송되면서, 용천재해물자 전달과 함께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원물자의 운송경로로 활용되게 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며, 향후 지원물자의 운송로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대북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였으나, 2004년 5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WFP를 통한 250,000톤의 식량과 UNICEF와 WHO를 통한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원물자의 전달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납치자 반환유골의 유전자검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면서, 지원의 집행이 중단되었다.

<표 III-2>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단위: 만 달러, 괄호안은 백분률)

구분	1995.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 계
일반 구호	23,225 (100)	455 (99)	4,329 (92)	2,891 (91)	565 (12)	1,434 (13)	6,067 (45)	4,174 (26)	6,157 (44)	5,623 (34)	54,920 (51)
농업 복구		5 (1)	205 (4)	254 (8)	3,941 (84)	8,562 (75)	5,476 (40)	7,351 (60)	7,673 (42)	6,034 (36)	39,501 (37)
보건 의료			189 (4)	40 (1)	182 (4)	1,380 (12)	1,996 (15)	1,967 (14)	1,933 (14)	4,894 (30)	12,581 (12)
계	23,225 (100)	460 (100)	4,723 (100)	3,185 (100)	4,688 (100)	11,376 (100)	13,539 (100)	13,492 (100)	15,763 (100)	16,551 (100)	107,002 (100)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올해에도 대북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지는 않았다. 비록 북한 내 구호활동 여건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206개 군 중 163개 군에 대한 접근만이 허용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도적 긴급구호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개발지원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EU의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과 식

량지원은 지속하고 있으나, 기술적 지원부문에 대해서는 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조건부포용정책(conditioned engagement)으로 정책노선을 전환하였으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의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엔전문기구를 비롯한 국제인도적 기구들의 북한 내 모든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요청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자유로운 접근이나 감독면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식량 등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되지 못한 기업소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들의 식량접근성이 약화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04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없이는 북한의 위기상황이 재현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현재와 같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누적된 영양실조 상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식수 및 위생보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부분적인 지원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민간단체들과 정부는 대북지원 10년을 기점으로 대북지원 중

합계획과 지난 10년 사업을 결산하는 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병원현대화사업 및 경제협력형태를 가미한 사업들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단체들의 본격적인 개발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지난 7월 이래 북한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방북·중단과 같은 정치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 상당수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기반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나. 이산가족문제

2004년 남북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상봉사업과 세 차례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의 성과가 있었다. 두 차례의 상봉사업은 지난 8차 상봉행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9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3.29~4.3, 금강산)을 통해서 총 2,475명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총 969명이 가족과 친척을 만났다. 방문단 1진에서는 남측가족 147명이 북측가족 235명을 상봉하고 2진에서는 북측가족 101명이 남측가족 486명을 상봉하였다. 남북자, 국군포로 3가족의 상봉도 이루어졌다. 또한 제9차 상봉행사부터는 그동안 다섯 가족씩을 선별 공개해 오던 관행을 없애고 모든 가족의 개별상봉을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상봉의 의의를 한층 더 높였다. 그러나 2진의 상봉행사 진행과정에서 남측 지원인원의 말실수로 인해 북측이 삼일포 참관 상봉을 취소하

는 등 행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남북은 협의를 통해 1시간으로 예정되었던 작별상봉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진행하고 남측단장이 북측에 사과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였다. 제 10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7.11~16, 금강산)을 통해서는 총 2,532명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총 957명이 가족과 친척을 상봉하였다. 방문단 1진에서는 북측가족 100명이 남측가족 471명을 상봉하고 2진에서는 남측가족 149명이 북측가족 237명을 상봉하였다. 제 10차 상봉사업에서는 1진의 상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측의 한 참가자가 자신이 북측 이산가족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친구를 만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서면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남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상봉단 1진의 출국수속을 하던 중 다시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며 당초 남측이 생사를 확인한 회보서에 없다가 최종명단에 포함된 참가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남측 이산가족의 귀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10차 상봉행사에서 북측은 남북자와 국군포로 각각 한 가족씩의 상봉을 허용했다. 그러나 남북 어부 박종임씨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국군포로 유상재씨는 북측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결국 상봉이 성사되지 못하고 남측 가족들은 대신 북한인 다른 가족들을 만났다.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문제로 인해 일부 남북관계 일정엔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성사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진행과정에서 한 남측 참가자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9차 상봉 때와는 달리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행사기간에 이루어진 정부의 40만 톤 대북식

량지원계획 발표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은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2004년 봄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지난 11월 말이 되어서야 제3차 남북 적십자 기술실무협의(11.25~27, 금강산)를 통해 12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간 합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질조사의 여러 과정 중 일부를 북측에 하도급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북측이 대가를 많이 요구함으로써 일이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북측이 지질조사를 늦추는 실제 원인은 조사지역이 군부 관할이어서 군부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도 알려진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와 북한이탈 주민의 대규모 입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함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것도 남북간 합의를 상당기간 지연시킨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북측이 제의한 제3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정부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비료 10만 톤 추가지원 결정, 겨울방학기간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 결정 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말 비료 10만 톤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한적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산가족과 면회소 건설 문제를 다룰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 또한 장재언 북한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면회소 건설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접촉을 제의하며 “남측의 비료지원 조치가 북남 적십자 관계 발전과 민족의 단합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초 면회소 건설이 착공되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1년 후에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면회소 운영 방식에 관한 남북한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따른 상봉인원의 규모확대와 상시 상봉의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2005년에는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사·주소확인 규모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자체 내의 기술적 미비로 인해 생사·주소확인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 비해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적은 사안이므로 남측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과 함께 기술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북측도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면회소 건설 착공 후에는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전시행불자 생사·주소확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은 일정수준의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이 문제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응한다면 핵과 인권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대북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안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측이 제안한 것이므로 한 두 차례의 전시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일정수준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면회소 건설이 착공되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도 남북한간 협의가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상봉의 정례화는 면회소 건설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나 면회소건설

작업이 진척되어감에 따라 운영방식 논의와 함께 상봉의 정례화 문제도 본격적인 협의사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면회소 건설 이전까지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금강산에서 순차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 규모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함께 이들이 중국, 또는 북한에서 가족을 상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1월 12일에 그동안 상봉행사에 참가했거나 생사가 확인된 남측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 107명의 명단과 사인, 기일 등 관련 기초 기록을 처음으로 북한 적십자회에 통보하고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추후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 임순희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2004년에는 미 의회 북한인권법 통과, 7월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국내입국,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등을 계기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제3국으로의 입국문제, 국내 적응문제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1월 30일 현재 1,768명으로 2003

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천 명을 넘어섰는데, 1999년 148명으로 3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4년에도 11월 말 현재 남성이 601명(34%), 여성이 1,167명(66%)으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2004년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입국사건(7.27~28)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하나원 분원의 수용규모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기존의 ‘보호위주’의 지원정책 대신 장려금제 및 취업보호제를 실시하는 등 자립·자활 노력 및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중앙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전담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정착지원을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국회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12.3)하였다.

2004년에는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규모 입국사건을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로 규정(7.28)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미국의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직후 발생한 점을 거론하면서 6자회담 지연과 남북대화

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서명(10.18)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는바,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NGO와 개인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0만 달러까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취득권을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으로의 난민이나 망명지위 신청에 장애를 받지 않으며, 국무부로 하여금 난민지위 신청을 용이하게 하도록 권고하는 법적 여건을 정비하고 있다. 아서 진 듀이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회견(11.16)에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북한주민들을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으로의 직접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서는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전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난민이나 망명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사회불안, 북·중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장치위(章啓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학교나 외교공관에 진입하도록 알선한 배후를 찾아내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발표(10.26)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기획방

명을 시도하기 위해 은신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65명과 이들을 지원하던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속 한국인 2명을 연행하였다.

한편, 11월 17일 몽골 언론에 따르면 몽골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몽고에 입국하는 경우 제3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난민촌 건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몽골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은 5년전 폐쇄하였던 몽골 공관을 다시 개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연설(10.28)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치적 억압이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부합되며 또 다른 부류인 ‘생계형’ 북한이탈주민 역시 본국 귀환시 출국비자 미소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외교공관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기획입국 시도가 증가하면서 기획망명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9월 1일 베이징 일본인 학교 29명 진입, 10월 22일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29명 진입, 10월 15일 베이징 한국대사관 20명 진입, 9월 29일 베이징 주재 캐나다대사관 45명 진입 시도와 그 가운데 44명 성공 등 기획망명의 대규모화가 동시에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획탈북과 관련해, 탈북자 기획망명에 관여하였던 오영필씨는 기자회견(7.22)을 통해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획망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표명이 구체화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8.15)에서 “제3국 탈북자들

의 어려움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벗어나 탈북을 조장한다면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NGO가 탈북자를 돕다가 뜻대로 안될 경우 탈북자 개인의 신변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때 탈북자가 체류한 국가의 반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차후 해당국의 협조도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기획입국의 논란은 실제 정착을 위해 활용해야 할 정착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가열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또는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가족과 상봉하거나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시 신변안전이나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국내정착 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 간첩교육을 받고 재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행제한 문제가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일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12.4)하였다.

2005년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북한이탈주민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이 지원되면 개인과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정보가 유입되면서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체제 이완을 우려한 북한당국이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신규탈북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일본, 남한으로 입국하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본토 안보 차원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듀이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 회견(11.16)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며 한국의 수용능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재일교포, 일본인 처 및 그 가족에 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획입국을 시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대부분의 기획입국자들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공관을 통한 기획망명 시도가 증가하면서 중국이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관련 당사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정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이 증가하면 제3국 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중국이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외교공관을 통한 기획망명으로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공관 진입이라는 기획망명 이외에 보다 '질서 있고 안전한 3국행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입국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면서 당국간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정착촌 및 해외 난민촌

건설 시도는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증가, 부적응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문제는 사회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착금을 활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북한으로 들어가 가족을 만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신변안전과 해외여행 제한,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보다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 김수암 ·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라. 인권문제

2004년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북 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와 더불어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상당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식량위기는 계속되고, 이에 따른 탈북 등 주민들의 '생계형' 사회일탈행위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연대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화 여론을 조성하였다. 유엔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화하였다.

제네바에서 개최(2004.1~4)된 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59차 회의(2003)에 이어 연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를 통해서 채택하였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등 대북인권 압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의 하원이 상원의 「2004 북한인권법안」(이하 북한인권법)을 통과(10.4)시켰고, 부시 미 대통령이 이에 서명(10.19)함으

로써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식량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권실태도 개선이 없다는 보고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당국의 핵개발 언급과 북핵6자회담의 지지부진한 진전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은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EU가 주도한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은 1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5항은 인권실태를 다루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평가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요구하였으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문화적으로 북한지도층에 대한 비인격화를 시작하였고, 의회는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조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북한 인권법을 발효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개선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주화, 개혁·개방을 위해 북한과의 교육, 문화적 교류와 접촉 및 대북 방송을 통한 정보유입을 지원한다. 둘째, 탈북자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미국에 수용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쿠바, 이라크 및 이란에 대한 ‘입법 개입주의’ 법안보다 비교적 온건하여 정권교체나 체제전복을 위한 반정부 인사

나 단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탈북자들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욕구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북한당국에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태국의 비릿 문타폰 교수는 제59차 유엔 총회(제3회의, 10.28)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법 행정을 개정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였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생계형’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강제추방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탈북자 보호를 위해 임시 대피처 및 보호소 설치,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중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권고하였다. 그의 보고서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열악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력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인권은 곧 국권으로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핵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북한을 ‘고립압살’하려는 2대 기등으로 삼고 북한의 ‘제도변경’을 실현하려는 ‘내정간섭적’인 것으로 규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인권이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침해의 핵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식량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권고와 설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인권레짐, EU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정권 유지에 부담이 가지 않고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인권문제에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선택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으로 북한당국은 지난 4월에 형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조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죄형법정주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간첩죄 및 불법 월경자에 대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차별 처벌하는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김정일 정권 유지와 주민들의 자본주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외국 연예물에 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였다. 또한 개방에 대비하여 소유권 보호, 탈세죄 및 상표권 침해죄 등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되나, 인권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제도와 실천과는 괴리가 많아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요덕(함남에 위치한 제15호)의 정치범수용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것이 10여 개의 정치범수용소의 전반적인 폐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북한당국은 유엔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레짐의 인권실태 조사 활동도 수년간이 걸리고 결과보고서의 구속력도 결여되어 있어 대북인권압력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권의 문호를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EU와의 관계를 재구축하여 미국의 압력을 견제하려 할 것

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자유왕래 및 귀환)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과 연계하고 남북한 인권대화 또는 지역인권대화를 제시하는 등 국제인권레짐과 미국의 인권압력을 무력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 정부는 가칭 ‘인권특사’를 임명하여 미국과의 정책 협의 및 북한과 인권 논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최의철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부록: 2004년 주요 사건일지

2004년 동북아정세 일지

- 1. 5~6 중국 대표단, 6자회담 협의차 러시아 방문
- 1. 6~10 미국 민간대표단 방북, 영변 핵시설 등 참관
- 1. 11~15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E)총회 개최, 북핵 등 주요안보현안 논의(베이징)
- 1. 13 중국, 일본 NGO회원과 탈북자 2명 구속
- 1. 13~17 일본 외무성 대표단 방북, 납북자 송환 교섭
- 1. 14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베이징 6자회담 조속 재개 방안 협의
- 1. 21~22 북핵정책협의 개최, 한·미·일 참가(워싱턴)
- 2. 1~2 켈리 미국 차관보 방한, 북핵 6자회담 개최 논의
- 2. 3 미·일·호주, 북핵·이라크 문제 논의(도쿄)
- 2. 9 북·러, 두만강 국경선 획정 합의
- 2. 23 한·미·일 3자협의 개최, 2차 6자회담 상호입장 조율(서울)
- 2. 23 탈북자 8명, 베이징 소재 독일학교 진입
- 2. 25~28 제2차 6자회담 개최(베이징)
- 2. 29~3. 2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한·미·일·영·프 등 참가(폴란드 바르샤바)
- 3. 8~11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 개최, 북·리비아·이란 핵문제논의(오스트리아 비엔나)
- 3. 8~12 페르손 스웨덴 총리, 한·일·몽골 순방, 북핵·동북아정세 논의
- 3. 13~15 캐롤 벨라미 유엔아동기금 총재 북한 방문
- 3. 15~4. 23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문제 등 논의(스위스 제네바)
- 3. 23~25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면담
- 3. 29 한·중 외무장관회담 개최(베이징)
- 4. 7~8 한·미·일 3국 북핵정책협의회, 북핵 CVID원칙 해결 재확인(샌프란시스코)
- 4. 15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찬성 29, 반대 8, 기권 16)
- 4. 17~18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 개최, 한반도문제 포함 18개항 의장성명 채택(아일랜드 킬테어)
- 4. 24 국제조사단(유엔 중심), 용천사고 1차 보고서 발표
- 4. 28~30 제1차 남·북·러 철도 전문가회의 개최(모스크바)

5. 4~9 북·일, 피랍 일본인가족 송환 비공식 협상 개최(베이징)
5. 12~14 6자회담 1차 실무회의 개최(베이징)
5. 2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개최, 경수로 사업 중단 방침 불변 성명발표
5. 22 북·일 2차 정상회담 개최(평양)
5. 26~29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베트남에 체류 중인 탈북자 실태조사
5. 31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모리스 스트롱 유엔사무총장 대북특사와 회담(모스크바)
6. 3 「북한선박입항금지법」 일본 중의원 통과
6. 5~8 독일·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방북
6. 8 중·미, 6자회담 관련 실무회담(워싱턴)
6. 13~14 한·미·일 3자협의회 개최, 제3차 6자회담의 공동대책 논의(워싱턴)
6. 16 유엔경제사회이사회 54개 이사국, 대북인권결의안 승인
6. 21~22 북핵 2차 실무그룹회의 개막(베이징 조어대)
6. 23~26 제3차 6자회담 개최, 총8개항 의장성명 채택(베이징)
6. 26~29 중국 국경경비대표단 방북 중 국경협력협정 체결
7. 1~2 백남순, 인도네시아 자타르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 남북공동언론발표문 채택, 북·미/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7. 3~5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남북 연쇄방문, 김정일 회담(7.4)
7. 9 중국법원, 탈북자 지원 한국인 무죄 판결
7. 12~14 김일철 방중,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등 회담
7. 20~2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개최, 경수로사업중단 후속조치 등 논의
8. 3~5 닝푸쿠이(寧賦魁) 중 북핵 대사 방일, 차기 6자회담 일정 및 의제 협의
8. 3~7 그레그 Korea Society 회장 방북
8. 11~12 북·일 납치 실무회의 개최(베이징, 주중일본대사관)
8. 13~20 사메지마 일 민주당 의원 방북
8. 17~18 알렉산더 다운너 호주 외무장관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면담
9. 10~13 리장춘(李長春)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면담
9. 12~14 세르게이 미르노프 러시아 연방의회 의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면담
9. 13~15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개최, 북핵 논의(오스트리아 비엔나)

- 9. 20~24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최(오스트리아 비엔나)
- 9. 25~26 북·일 납치문제 실무협약(베이징)
- 9. 28 미국 상원,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 9. 28~10. 9 유엔 식량기구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 대표단 방북
- 9. 29 탈북자 44명,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1명 공안에 체포, 44명 진입성공)
- 10. 4 제19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 개최, 북한 미사일문제 등 논의(서울)
- 10. 4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안」 재통과
- 10. 18 「북한인권법」 부시 미 대통령 서명
- 10. 18~20 김영남 방중,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회담
- 10. 22 탈북자 추정 29명, 베이징 한국학교 진입
- 10. 23~26 파월 미국 국무장관, 북한 문제 관련 아시아 3국(한·중·일) 순방
- 10. 27 중국 언론, 탈북자 60여명 체포 확인 보도
- 10. 28 탈북자 1명, 러시아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진입
- 11. 4~6 제1회 아세안안보포럼(ARF)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베이징)
- 11. 9~12 북·일 납치문제 실무협약(평양)
- 11. 12 북·일 납치실무회의 11. 15까지 연장
- 11. 18 한·러 외무장관 6자회담 관련 양자회담
- 11. 24~26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한반도 담당대사 방북
- 11. 2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사업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발표
- 12. 2 일본학교 진입 탈북자 중 15명 중국 출국
- 12. 13 북·중 경제장관 회담(북-림경만, 중-보시라이(薄熙來))
- 12. 23 중국, 탈북자 외국공관 진입 엄중 대처(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2004년 북한사건 일지

- 1. 9 남포시(직할시)를 특급시로 개편, 평안남도에도 편입
- 1. 19 김정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뤼(王家瑞)) 일행 접견
- 1. 20 평양·단동 간 국제버스 운행 계획 발표(음력설 이후 운행, 흑룡강신문)
- 1. 23~2. 7 양형섭, 아프리카 4개국 순방(우간다, 나이지리아, 기니, 세네갈)

- 우간다 방문(1.23~26): 발리바세카 부통령(1.24), 무쎬베니 대통령(1.25)과 회담
 - 나이지리아 방문(1.27~31): 오바산조 대통령 예방(1.28)
 - 기니 방문(1.31~2.4): 라미 스티네 수상 방문 및 국회의장과 담화(2.3), 란사나 콩페 대통령 예방(2.4)
 - 세네갈 방문(2.5~7): 압둘라예 와데 대통령 면담(2.5)
2. 2 백남순과 김영일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성대표단(단장 알리스태어 머레이 맥클린) 면담
2. 21~24 박봉주, 유럽의회 대표단(단장 자끄 쌍페르) 면담
3. 11 최태복 체코방문-체코 국회 하원대표단과 회담
3. 25 경제대표단, 나이지리아 방문(3.25 평양출발)
3. 25 최고인민회의 제1기 2차회의 개최(평양 만수대의사당)
4. 8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김영남, 조명록 등 참가)
4. 10 시하누크 캄보디아 국왕 방북, 김영남 영접, 면담 및 환영 연회 배설(인민문화궁전)
- 4.13~22 제6차 김일성화 축전 개최(개막식 참석-김영남, 박봉주, 최태복 등, 폐막식참석-김영남, 최태복, 정하철 등)
4. 14 김일성 생일 9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김영남, 박봉주 등 참가)
4. 14 최고사령관 명령, 장성 승진인사(73명)
4. 19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북인권결의안 비난 담화 발표
4. 22 평북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 발생
4. 24 인민군 창건 7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김영남, 박봉주, 연형묵 등 참가, 4·25인민문화회관)
4. 24 용천역 열차폭발사고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사고원인, 피해 상황, 국제사회 지원요청
4. 27 체크 외무성 대표단 평양 도착
4. 27 북·베트남 「규격화·계량 및 품질관리부분 협정」 체결
4. 29 제5차 형법 개정
5. 1 5·1절 114돌 기념중앙보고대회 개최(박봉주, 양형섭 등 참가, 평양방직공장)
5. 1 박봉주, 남측 노조단체 대표단 면담(인민문화궁전)
5. 1 백남순과 김영남, 각각 누르 하싼 위라유다 인도네시아 외무상과 회담(5.1, 5.3)
5. 3 백남순, 방북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주최한 북·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설정 40주년 기념 연회 참석
5. 13 김영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일행 면담

5. 13 최태복, 방북 요한네스 플루그 독일 시민당의원 일행 면담
5. 13 북·산마리노, 국교 수립
5. 17 최태복과 백남순, 각각 방북 폴란드 외무성대표단(단장 보그스와브 잘레스키) 면담
5. 17~22 동북아 전력 연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남·북·일·중·러 등 11개국 참가(서울·창원)
5. 20~24 제2차 일본과거청산 국제연대협의회 개최, 남·북·미·일·중·필리핀 참가(서울)
5. 21 김영남, 방북 노르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및 모리스 스트롱 유엔사무총장 대북특사 일행 각각 면담
5. 22 김정일, 방북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북·일 정상회담 진행
5. 29 체신대표단, 중·베트남·태국 방문
6. 1 최수현,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1차대회(브라질 상파울로) 참가차 평양 출발
6. 4 경수로 건설 중단 관련 대미 비난(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6. 5~8 독일·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방북
6. 7 김영남, 적십자·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단장 마르크 니스칼라) 및 독일·북 의원그룹대표단(단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각각 면담
6. 8 일본의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 통과 비난(『로동신문』 논평)
6. 9 평양주재 체코 대사관 재개설
6. 10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52군부대(오중흡 7연대) 시찰
6. 15 북·아프가니스탄 정상회담(워싱턴)
6. 24 변영립, 북·우크라이나 과학원간 2005~2007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식에 참석(우크라이나)
6. 24 최수현, 쿠바·페루·브라질 방문 마치고 귀북
6. 26~28 중앙은행 대표단,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 참가
6. 28~7. 7 고구려 벽화고분,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7. 1 최태복, 김일성 서거 10돌 중앙연구토론회 참석(인민문화궁전)
7. 2 김정일, 러시아 모이세예브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 관람
7. 2 백남순, 제1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상급회의에서 연설, 파웰 미 국무장관 등과 회담(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 2 조명록, 김일성 서거10돌 인민무력부 발표회(4·25인민문화회관) 참석
7. 3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 방북
7. 4 세르게이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담
7. 8 김정일, 김일성 서거10돌 즈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앙추모

- 대회 참가(조명록, 김영춘 등 참가)
7. 8 조평통 대변인 담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민간급 대표단
방북 불허 비난
7. 10 김형직(김정일조부)생일 10돌 맞아 중앙보고회 개최(인민문화
궁전, 고위간부참석)
7. 12~14 김일철 중국 방문,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등 회담
7. 19~8. 12 외무성 대표단(단장 김영일 부상), 라오스·캄보디아·몽골 순방
7. 24 외무성 대변인, 핵동결에 따른 보상에 미국 참가 요구
7. 26, 29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8.3~6) 불응
7. 31 김정일, 방북 시하누크 캄보디아 국왕의 숙소 방문
8. 6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재개설
8. 13 김영남, 광복 59돌 기념 경축음악회 관람(만수대예술극장)
8. 13~20 사메지마 일본 민주당 의원 방북
8. 15 북한 최초 외국계 법률회사 평양에 설립
8. 17~18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장 등 면담
8. 17~19 박길연 주유엔대사, 비동맹 외상회의 참석(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8. 18 김영남과 백남순, 각각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면담
8. 31~9. 4 북·EU, 경제개혁·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EU·나우만재단·
북한외무성 공동주최, 인민문화궁전)
9. 1 북·시리아, 통상·과학기술협정 체결(다마스쿠스)
9. 1~13 리장춘(李長春)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김정일 국
방위원장 등 면담
9. 8 9·9절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인민문화회관, 김영
남, 조명록, 박봉주 등 참가)
9. 11~10. 12 2004년도 제5차 실종미군 유해발굴 사업(평북·함남)
9. 11~14 영국 빌 라멜 외무차관 방북
9. 12 김정일, 중국 당·정 대표단 접견 및 중국 예술단 공연 관람
9. 12~14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의회 의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
원장 등 면담
9. 12~20 제9차 평양영화축전 개최(평양국제영화회관)
9. 13 김정일, 박봉주와 최태복, 각각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
평의회 의장 면담
9. 14 김영남,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 평의회 의장 면담
9. 19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병사
9. 27 최수현 외무성 제1부상, 유엔총회 제5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
9. 28 조평통 대변인,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파병병력 철수 주장
9. 28~10. 9 유엔 식량기구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 대표단 방북
10. 6~9 당총비서 추대 7돌(10.8) 및 노동당 창건 59돌(10.10) 기념행사

- 개최
10. 7 당창건 59돌 경축 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인민문화궁전-김영남, 박봉주, 최태복 등 관람)
10. 19 김영남, 중국 호금도 주석 및 온가보 국무원 총리 면담
10. 22 외무성대변인, 남한 핵문제 우선 논의 등 6자회담 개최 조건 발표
10. 22 해외동포 경제인 대상 「평양-옥타(World-OKTA) 무역상담회」 개최(평양 인민문화궁전)
10. 25 김영남, 북·모잠비크 간 쌍무적 협조관계 확대회담 참가
10. 29 구월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11. 1 백남순, 니콜라우스 웨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상 특사일행 면담
11. 2 김상익,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안보정책회의 참가(베이징)
11. 12 북·터키, 무역 및 경제협조협정 체결(터키 앙카라)
11. 13~16 EU 트로이카 대표단 방북(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 10명), 제7차 북·EU 정치대화 개최
11. 15 김영남,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관 방문, 故 야세르 아라파트 조문
11. 15 백남순 외무상, 유럽동맹 트로이카 대표단 면담
11. 16~20 장 평 유엔총회 의장(가봉 외무장관) 방북, 백남순 의장이 일행 면담(11.16)
12. 1 김영춘 군총참모장은 쿠바 방문
12. 10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0차 의정서 조인
12. 10 북한 경제무역대표단, 중국 방문
12. 21~22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 방북

2004년 남북관계 일지

1. 8~10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관련 실무접촉(금강산)
1. 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및 제2차 청산결제 실무협의 개최
1. 28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일부 교체 통보
2. 3~6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북한 핵문제 및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등 남북관계현안 논의(서울)
2. 25 북한,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광고규정 채택
2. 25 남북토론회 개최,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 토론, 상지대 강만길 총장 등 참석(인민문화궁전)
2. 25 남북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세계올림픽연합회(ANOC) 총회(2.22~27, 아테네)시 체육 교류문제 협의

- 2. 25~26 제4차 해운협력 및 제9차 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 개최(개성)
- 2. 25~28 제2차 북핵 6자회담 개막(베이징 조어대)
- 3. 2~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회의 개최(서울)
- 3. 2~6 실무대표단(단장 이형규 전북 행정부지사) 황해남도 방문-북민화협 최성익 상무위원과 남북 농업협력 합의
- 3. 2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
- 3. 3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 안청 안료 15통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
- 3. 8 정세현 통일부장관, 강원도 비무장지대 내 동해선 공사현장 방문
- 3. 12~14 금강산 새내기배움터 개최(남북대학생 참가, 금강산)
- 3. 13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평양개최 합의
- 3. 15 남북 적십자사,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각 200명) 생사 및 주소확인 결과 교환
- 3. 18 남북, 9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 교환
- 3. 20~23 남북 해외청년학생대표자회의 개최(심양)
- 3. 29~4. 3 제9차 이산가족 상봉 개최(금강산), 1진 방문단 147명(3.29~31)·2진 상봉단 486명(4.1~3)
- 4. 4~6 청소년적십자 단원(28명), 금강산 방문 및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참가
- 4. 8~10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회의 개최(개성)
- 4. 13 개성공단건설 1단계 1백만 평 부지의 토지임차료 계약 체결
- 4. 16 대북 비료지원 첫 향차 출발
- 4. 20~22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 개최(파주)
- 4. 27 남북긴급구호회담 개최(개성)
- 4. 27 용천동포돕기본부 공식 출범
- 4. 29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세관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채택
- 4. 30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권호웅으로 교체 통보
- 4. 30~5. 3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및 체육행사 진행(평양)
- 5. 3 남측의료대표단(27명),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평양)
- 5. 4 대한적십자사, 70여 톤의 용천재해지원 제3차 긴급구호물자 대북수송
- 5. 4~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5. 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광고규정·노동규정 채택
- 5. 10 대한적십자사, 제2차 복구 자재, 장비 인천, 단둥항을 통해 북송
- 5. 12 대한적십자사, 제5차 긴급구호물자 북송

- 5. 24~25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금강산)
- 5. 26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금강산)
- 6.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조선사회과학자협회·연변대 민족연구원 공동주최)
- 6. 2~5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평양)
- 6. 3~4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설악산), 합의서 발표(6.4)
- 6. 4 북한 경비정 서해 NLL 한때 월선
- 6. 5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시범단지분양 입주업체 선정
- 6. 10~12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개성)
- 6. 14 남북 경비정, 무선교신 성공
- 6. 14~17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남·북·해외 1350여명 참가, 인천)
- 6. 14~20 남북공동사진전시회 개막(평양문화전시관)
- 6. 23 대한적십자사, 대북지원 포함비료 5천 톤 북송(북측 요구 총 20만 톤의 북송완료)
- 6. 23~25 남·북 올림픽위원회(NOC) 실무회의 개최(베이징)
- 6. 23~26 굿네이버스 대표단(100여명) 방북, 대북지원배분확인(평양)
- 6. 24~25 개성공단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막
- 6. 25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 개최
- 6. 26~28 남북농민통일대회 개최(금강산)
- 6. 29~30 남북장성급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개최(파주)
- 6. 30~7. 2 제10차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금강산)
- 6. 30 개성공단 부지조성 준공식 개최(남측통일부차관 등 참석, 개성)
- 7. 1 남북외무장관회담 개최(자카르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 중)
- 7. 2 금강산 호텔 개관(현대아산 운영)
- 7. 3 금강산 당일관광 시작
- 7. 5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개성)
- 7. 8 조평통 대변인 담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민간급 대표단 방북 불허 비난
- 7. 11~16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개최(금강산), 1진 방문단 471명(7.11~13)·2진 상봉단 149명(7.14~16)
- 7. 14 북한 경비정 NLL 월선(아군 함포사격)
- 7. 18~20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금강산), 공동결의문 채택
- 7. 20 대북식량차관 쌀 40만 톤 중 10만 톤 육로로 북송시작
- 7. 23~24 남북,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 합의(베이징)
- 7. 2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제11차 회의 개최
- 7. 24~26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금강산)
- 7. 26 소형 북한어선 2척, 백령도 인근 서해 NLL 침범

- 7. 27~28 동남아 체류 중인 468여명의 탈북자, 2차례 나눠 입국
- 7. 29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 대규모 탈북자 입국 비난
- 7. 29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채택
- 8. 4~5 방송위원회 대표단 방북(금강산)
- 8. 13 북한 민화협 성명, 8·15 통일행사 무산 발표
- 8. 13~29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참가, 개·폐막식 남북공동입장(북한-9개 종목, 선수 36명, 임원 33명 참가, 종합 58위)
- 9. 2~4 남 민주노동당·북 사회민주당 실무접촉(금강산)
- 9. 11~12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개최(금강산)
- 9. 13~15 남북 철도·도로 개통 관련 실무협의(개성)
- 9. 21 북한,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 채택
- 10. 5~7 남북 민화협 실무접촉(금강산)
- 10. 7 동·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접촉(동·서해지구 군사분계선상)
- 10. 12~14 경의선·동해선 철도역사 실시설계 관련 실무협의(개성)
- 10. 14~15 대북 식량차관 분배현장 방문(고성·개성)
- 10. 20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시범단지 공장 착공식(개성)
- 10. 21 개성공단 토공 개발사무소 준공식(개성)
- 10. 31~11. 1 남 민주노동·북 직총 간 실무협의(금강산)
- 11. 1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NLL 침범
- 11. 3~4 개성공단 남북사업자 간 전력·통신협상(개성)
- 11. 9 남 개성공단 관리위·북한 특구총국 간 업무협의(개성)
- 11. 19~20 금강산 관광 6주년 기념행사(금강산 문화회관)
- 11. 25~27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금강산)
- 12. 3 남북, 개성공단 전력공급방식 합의
- 12. 6 NLL 월선·표류 북한어선 북상조치
- 12. 7 북한 경비정 1척 NLL침범
- 12. 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리빙아트)
- 12. 26 광복 60주년 남북행사(2005.8) 실무접촉(베이징)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중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접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여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함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장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